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1996. 12.

허 문 영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요약

본 연구는 한반도문제를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의 실태와 경제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을 전망한 후, 북한의 경제난 해결 협력 차원에서 남북경협의 발전방향과 사안별 정책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1. 북한의 경제난 실태: 4대난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식량난·에너지난·생필품난·외화난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식량난의 경우 해외원조 및 수입과 텃밭 등에서의 생산을 통해 한계수요량은 확보되었으나, 정상수요량에는 최소한 200만톤 이상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에너지난의 경우 원유공급의 중단과 석탄생산의 감소에 따른 전력생산의 감소로 인해 공장가동과 운송부문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생필품난의 경우 1995년 경공업 생산이 전년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외화난의 경우 무역적자와 더불어 구소련의 원조중단·중국의 경화결제 요구·서방국가의 대북 경제제재 지속·김일성 사후

조총련의 송금 감소 등으로 인해 총외채에 대한 수출비율이 1,000%를 초과하여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2. 북한의 경제정책 현황: 자력갱생과 도입정책

4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선택한 대내외 경제정책을 분석·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농업제일주의와 분조도급제 그리고 식량원조 도입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은 주체농법과 같은 정책적 문제와 더불어 자급자족이 거의 불가능한 농업의 구조적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에너지난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중·소규모의 발전소 건설과 석탄 증산과 에너지 절약과 같은 자력갱생 지향적 에너지 증산·절약정책과 서방국가로부터의 중유 및 경수로도입과 중국으로부터의 원유·석탄 원조 확보와 같은 에너지 도입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KEDO의 중유 공급과 중국의 원조 그리고 내부 증산·절약을 통해 에너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생필품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자투리 원부자재를 이용하는 ‘8·3 인민소비품’ 증산운동과 자력갱생의 ‘맹산군 따라배우기 운동,’ 그리고 외자도입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내부자원의 고갈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이같은 정책들의 효율성

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외화난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은 수출생산기지 건설과 신 무역체계 도입 그리고 무역확대정책과 국제적 무기밀매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1995년 북한의 총무역액은 20.5억 달러로 전년도 21.1억 달러보다 2.4% 줄어들었으며, GNP 대비 무역의존도도 전년 대비 0.8% 하락하였다.

요컨대 북한은 식량난·에너지난·생필품난·외화난을 대내적으로 '자력갱생과 고난의 행군정신'의 강조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정치적 차원에서의 대주변4국 유인외교와 경제적 차원에서 도입정책을 통해 풀어가려고 노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내부 자원의 고갈 그리고 인프라 등 투자 여건의 미비로 인해 근본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 '주체형 대외개방' 노선 채택

향후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할 경우, 북한은 점진적 개혁·적극적 개방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4대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데올로기 보다 경제적 실리에 비중을 둔 정책노선을 더욱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북한은 점차 「자주형의 자력갱생 경제발전 노선」에서 「주체형의 대외개방 경제발전 노선」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선택할 정책방향을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난 해결을 위해 북한은 분조도급제 지속과 농민시장에 대한 제한적 통제와 더불어 자력갱생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본·기술 지원과 식량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식량 수입정책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기존 증산·절약 정책을 강조하되, 대외적으로는 에너지 개발을 위한 양자 또는 다자적 합작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생필품난 해결을 위해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간부교육과 현대화를 강조하되, 남한정부를 배제한 채 남한기업과의 경제교류 활성화 및 합작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단 남북한 공히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북한은 경공업발전을 위한 서방자본 유치를 위해 제한적인 남북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다.

넷째, 외화난 해결을 위해 북한은 나진·선봉 지대 개발을 위해 양자 또는 다자적 국제경협에 적극 호응할 것이며, 나진·선봉 특구의 실험이 성공할 경우 신의주, 남포, 휴전선 인접지역(개성·금강산) 등으로 특구를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북한은 제2경제위원회를 통한 군사무기 밀매를 인민무력부의 외화 획득 차원에서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4대난 해소와 민족경제 육성

남북경협은 남북한간 물품의 반입·반출을 의미하는 경제교류와 각종 투자 행위를 의미하는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리고 남북경협은 간접 또는 직접교역, 위탁가공 무역, 다자간 협력, 제3국에서의 남북한 공동개발, 남북한간 공동개발 등 5가지 방식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현 단계에서 북한의 경제난 해결 및 체제안정화 욕구를 충족시키며 민족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은 임가공 무역과 다자간 협력이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직접교역과 남북한간 공동개발이 주요 경협 방식이 될 것이다.

1988년 이후 전개된 남북경협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자교역의 경우 교역 총액은 1991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주었고, 교역 방식은 반입 중심·간접교역 위주·대기업 주도·위탁가공 활성화의 특징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협력사업의 경우 큰 진전이 없었다. 그리고 대북지원의 경우 정부주도하에 북한의 에너지난과 식량난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었고, 생필품난 및 외화난 해결을 위한 사업들도 제시되었다.

한편 남북간의 정치적 관계·북한의 내부사정·남한의 국민합의 불일치와 정책적 일관성 부족·제도적 장치 미비 등이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일반적 장애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사안별로 검토해 볼 때, 농업부문의 경우 간접교역 및 구상무역 중심의 교역방식·북한 농업제도의 구조적 한계·농업협력에 대

한 정치적 결단 등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부문의 경우에는 북한의 체제 불안정화요인에 대한 고려와 남한의 정·경분리 불가정책이 주요 제약요인이 된다. 그리고 생필품 및 무역부문의 경우 북한의 구매력 부족·북한 수출상품의 제한성·간접교역 및 수송체계 미흡에 따른 물자교역의 비효율성 그리고 북한 당국의 주저함 등이 주요 장애요인이 된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이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선택해야 할 남북경협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경협의 목표는 민족경제 발전과 민족복리 향상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 세부목표로서는 남북한 지역경제의 보완적 발전·남북한 지역경제의 경제력 격차 해소·남북한 경제체제의 이질성 극복·남북한 지역경제의 개방적 경제로의 발전 지향·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 등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경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북한의 자주적 체제발전에 대한 협력'노선이 공고화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경협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북한의 현실과 정책방향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 경협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방적 지원 또는 시혜의 태도가 아니라 상호존중의 협력적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경협정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민간기업의 역할 분담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 경협정책을 통일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 추진하도록 하며, 한국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기에 따라 중점사업을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남북한 직접 경협이 어려울 경우, 다자간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하도록 한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이와같은 자세에 기초하여 사안별 정책방안을 단·장기로 구분·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부문의 경우 북한의 주권과 명분을 배려하여, 물자교류에서 경제협력 그리고 인적 교류로 단계적·점진적 협력방안을 추진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무엇보다 대북 식량지원을 먼저 재개하고, 점차 남북한의 특성에 맞게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상하여 상호 보완적 교역을 추진한다. 그리고 남북경협기금 활용에 의한 가격유인 제공과 거래 방식의 다양화 그리고 북한 경제관련 자료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 남북 농산물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거래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합작건설과 북한의 농업용 자재산업을 위한 투자 촉진, 그리고 품종 공동개발과 제3국 농업분야에의 공동 진출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에너지 부문의 경우 교류 활성화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남북 통합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추진한다. 즉 남한은 북한의 입지조건을 활용하고, 북한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남북한 모두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대북 에너지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바, 남한의 과잉생산품인 고유황 경유와 납사를 북한의 석탄과 부등가 교환하는 방안과 남한의 에너지와 북한의 광물자원을 구상무역하는 방안 그리고 남북한

전기 공급협정 체결 방안을 전향적으로 모색하도록 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북방자원 개발과 원유 탐사작업에 합작 투자를 통해 공동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공동이익 확보를 적극 모색하며, 북한이 거부할 경우 다자협력을 통해 에너지부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도록 한다.

셋째, 경공업부문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대남 신뢰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점차 대북 경협정책을 대북 정치·군사정책과 연계시키는 전략에서 탈피하며 위탁가공 교역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한다. 또한 남북경협을 실질적 진전을 위해 기업주도·정부지원의 역할 구도를 확립하도록 하며, 남북 교역제도를 효율적이도록 개선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의 회복을 지향하면서도 북한 체제에 부담이 적은 협력사업과 남북한 상호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한다. 예컨대 남한에서는 임금 및 지가 상승으로 이미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의류, 신발, 완구, 섬유 등 단순 소비재의 임가공 및 합작사업에서 시작하여 점차 정밀기계, 기계부품을 거쳐 화학공업, 전기·전자산업, 기간 산업으로 합작사업 범위와 규모를 확대시켜 나간다.

넷째, 무역부문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무역확대를 위해 국제사회로의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바,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국제경제기구(APEC, GATT, IMF, IBRD, ADB)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그리고 북한의 남북교역 및 대외무역정책에 대해 민족중시적 자세를 견지하고 인내심을 갖고 협력하도록 하며, 남북경협 대화창구를 중국과 미국에 상설화한다. 한

편 장기적으로는 「남북 산업구조조정 협의회」를 결성하여 남한의 수출경쟁력 회복과 북한의 원만한 경제개혁 추진을 모색케 하며, 「남북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남북간 자유무역을 보장하도록 한다.

목 차

제 I 장 문제 제기	1
제 II 장 북한의 경제난 실태: 4대난	4
1. 식량난	5
2. 에너지난	11
3. 생필품난	14
4. 외화난	18
제 III 장 북한의 경제정책 현황: 자력갱생과 도입정책	21
1. 농업제일주의와 식량원조 확보정책	21
2. 증산·절약과 증유 및 경수로 도입정책	26
3. 「8·3 인민소비품」 증산운동과 외자 도입정책	30
4. 수출증대 운동과 무역 확대정책	35
제 IV 장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 ‘주체형 대외개방’ 노선 ..	43
1. 분조도급제와 식량 지원·수입정책 확대	46
2. 에너지 개발과 합작사업 추진	48
3. 간부교육과 대남한기업 경협 증진	50
4. 무역제일주의 강화와 무기밀매 지속	51

제 V 장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54
1. 남북경협 실태	54
2. 남북경협 방향	70
3. 농업 협력 방안	78
4. 에너지 협력 방안	82
5. 경공업 협력 방안	86
6. 무역 협력 방안	90
참고문헌	93

도표 목차

<표>

<표 2-1> 북한의 연도별 총곡물수급 실태 추이	7
<표 2-2> 1996년 북한의 총곡물수급 실태	10
<표 2-3> 북한의 국가별 원유도입 실적	13
<표 2-4> 북한의 주요 생필품 가격	17
<표 2-5>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19
<표 2-6> 북한의 외채현황	20
<표 5-1> 연도별 통관현황(1989~1996.7)	58
<표 5-2> 위탁가공교역 승인현황(1991~1996.8)	60
<표 5-3>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현황	62

<부표>

<부표 1> 나진·선봉지대 외자유치를 위한 우대 조치	101
<부표 2> 북한의 외자유치 희망분야	102
I. 공업 투자 대상 목록(101개)	102
II. 하부구조(15개)	105
III. 봉사부문 투자 대상 목록(3개)	106
<부표 3> 북한의 외자유치 우선 대상 목록(50개)	107
<부표 4> 북한 외국인 투자 관련 법체계	109
<부표 5>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현황	111

제 I 장 문제 제기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은 김정일의 공식적 권력승계를 지연시키는 한편, 남북대화를 거부한 채 대미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이 사망한 지 만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정일의 당 총비서 및 중앙군사위원장 그리고 국가주석 취임을 지연시키고 있다.¹⁾ 또한 북한은 「북·미 기본합의문」 채택(1994.10.21), 「북·일회담 재개를 위한 합의서」 채택(1995.5.30), 「경수로공급협정」 체결(1995.12.13) 등 핵문제의 잠정적 해결과 더불어 대미·일 관계개선을 통해 대외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는 적대적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정권이양 지연 및 남한배제적 대외관계 개선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사려깊은 통일정책 수립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정통성과 통제성을 상당 수준 이상으로 확보해 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내 난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1)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이 이미 거세되었다는 ‘실질적 거세설’, 김정일이 군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군부통제설’, 김정일과 당 정치국원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는 ‘당적 지배체제 형성설’, 김정일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유일지배체제 지속설’ 등이 있다. 필자는 김정일이 후계자 준비를 지난 20여년 이상 진행시켜왔다는 점에서 유일지배체제 지속설을 지지한다. 허문영, “김정일정권의 안정성과 지속성”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발표대회 논문, 1995.12).

으로써 유효성을 증진시키고 대외관계를 잘 만들어감으로써 연대성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유효성과 연대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김정일 정권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북한이 남한을 배제한 채 대외관계 개선을 시도하게 됨에 따라 주변4국의 대북한 영향력확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게 되면,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자주적 해결의지와는 달리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는 동시에 엄청난 혼란속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 협력창구를 만들지 못한 우리로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문제를 민족주체적 관점과 국제협력적 자세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문제는 민족통일 문제와 평화정착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일은 평화정착 문제이다.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노력과 더불어 미·일·중·러를 비롯한 주변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족통일은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남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이기 때문이다. 외세의 도움에 의해 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그것은 통일한국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필자는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단기 및 장기 국가목표로서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합의 통일을 위한 대북 협력정책이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위한 대북 봉쇄정책 보다 효율적인 전략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난 실태 및 경제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경제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북한의 경제난을 식량난, 에너지난, 생필품난, 외화난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둘째, 북한은 이같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경제정책을 그동안 추구해 왔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정책을 대내정책과 대외정책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후, 그 성과에 대해 평가해 볼 것이다.

셋째, 북한은 향후 김정일 정권 공식출범 이후 어떠한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김정일 정권이 선택할 경제정책 노선 변화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농업·에너지·경공업·무역분야에서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을 예측해 볼 것이다.

넷째,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선택·추진해야 할 것인가? 이 연구의 최종목적인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적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제II장 북한의 경제난 실태: 4대난

김정일 정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당면난제 해결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²⁾ 이에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식량난·생필품난·외화난 해결을 위해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³⁾ 북한은 1995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경제시책 방향으로서 3대제일주의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재천명하였다. 그리고 1996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서는 3대진지노선⁴⁾을 새로 제시하는 동시에 3대제일주의를 반복하였다.⁵⁾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식량난과 에너지난, 생필품난 그리고 외화난의 실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2) Seymour M. Lipset,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Inc., 1963), p. 64.
- 3) 북한은 당 중앙위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1993.12)에서 「제3차 7개년계획」 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완중기(1994~96)과업의 실천방안 또는 ‘혁명적 경제전략’으로서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채택하였다. 이는 현재 북한의 경제정책 근간이 되고 있다. 허문영, 「1993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결과분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4) ‘정치사상진지, 경제진지, 군사진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3대진지 강화노선」은 사회주의진영의 몰락 및 마이너스 경제성장 그리고 김일성 사망에 따른 위기적 상황에서 정권 및 체제유지를 위해 내부정비를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수세적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허문영, “1996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 「월간 통일」 제1호 (1996).
- 5) 북한의 김영남 외교부장은 1995~96년의 흉수(피해액 총 172억 달러)와 동구의 몰락으로 인해 북한경제가 붕괴위기에 놓여있음을 시인하였다. 독일 ZDF-TV 1996.12.11. 「조선일보」, 1996.12.13. 재인용.

1. 식량난

북한의 식량난은 농지면적의 절대부족⁶⁾·집단영농방법의 비효율성·영농기술의 낙후 및 자재 부족·무리한 농업자급화 정책(다락밭 개간 실패)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것이 되었으며, 1994년 가뭄·1995~96년 수재 등 자연재해⁷⁾로 인해 위급한 것이 되었다.⁸⁾ 북한의 식량난 실태 및 체제변화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하나는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⁹⁾ ‘북한의 붕괴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¹⁰⁾는 주장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식량난이 ‘아직 위기상황이

6) 총 경지면적 199.2만 ha(논 58.5만 ha, 밭 140.7만 ha)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서울: 통계청, 1996.11) p. 204. 북한은 ‘논 60만 정보, 강냉이밭 70만 정보’로 밝히고 있다. 김일성, “농촌경리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며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한 연설, 1982.12.9,” 「김일성저작집 3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355.

7) 북한은 1995년 7월 31일~8월 18일 사이에 발생한 수재규모를 68명 사망, 145개군 수재민 520만명, 피해액 150억 달러로 발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1995.9.6. 한편 1996년 수재로 인해서는 사망 116명, 117개 도시 수재민 327만명, 피해액 17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신보」, 「동아일보」, 1996.9.6. 재인용.

8) 북한의 주체과학원 학자들과 평양시 만경대구역 용봉리 협동농장 작업반장 등은 ‘알곡감산’의 원인을 ① 장기간 정부의 농업부문 투자부족에 따른 생산도구·운수도구·에너지 및 화학비료의 부족심화, ② 봄철의 가뭄과 한냉기후 및 여름과 가을 초의 장마 및 태풍에 따른 자연피해의 심화, ③ 농촌 노동력의 대부족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북학자의 전언(「민족통일연구원 내부세미나」, 1996.10).

9) 「조선일보」, 1996.8.2; 「서울신문」, 1996.8.8; 「국민일보」, 1996.10.26.

10) 중국의 북한전문가, 「민족통일연구원 내부세미나」, 1996.11.4.

아니며'¹¹⁾ '체제붕괴에 대한 식량난의 영향력 또한 과대평가되어 있다'¹²⁾는 주장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미칠 식량난에 대해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연간 식량수요량과 생산량을 정확히 규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북한 당국만이 추출할 수 있으나,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에 따르면(<표 2-1>참조), 북한의 총곡물 수요는 연간 650~670만톤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생산량은 1990년 482만톤, 1992년 427만톤, 1994년 413만톤 등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북한은 1992년 이래 매년 약 200만톤 이상의 만성적인 식량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은 부족한 식량을 해외수입으로 보충해 왔으나, 외화 부족과 중국의 지원감소¹³⁾로 인해 절대부족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1) 錢基琛 중국 외교부장 발언, 「동아일보」, 1995.12.21;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 발언, 「한국일보」, 1996.1.4.

12) 중국의 한반도전문가, 「민족통일연구원 내부세미나」, 1996.11.25.

13) 북한의 최대 곡물지원국인 중국은 1992년부터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경화결제를 요구하는 한편, 중국 남부지역의 대규모 홍수로 인해 동북3성 지역의 곡물수출을 금지함으로써, 1994년 8월 이후 중국의 대북한 곡물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 (1995.5); 북한의 대중국 곡물수입은 1992년 65만톤, 1993년 99만톤, 1994년 24만톤.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각년도.

<표 2-1> 북한의 연도별 총곡물수급 실태 추이

(단위: 정곡 만톤)

구분 연도	수요량	전년도 생산량	부족량	도입량	절대부족량
1991	647	481.2	165.8	130	35.8
1992	650	442.7	207.3	83	124.3
1993	658	426.8	231.2	109	168.2
1994	667	388.4	278.6	36	242.6
1995	672	413	259	(110)	(149)

주: 각 연도의 곡물총공급량 중 생산은 전년도 수치임.

1995년 도입량 및 절대부족량은 필자의 추정치임.

자 료: 농촌진흥청, 「북한의 곡물생산량 추정」, 각년도.

유엔조사단 보고서¹⁴⁾에 나타난 북한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1996년 북한의 총곡물수요는 764만톤(식용 487만톤, 사료용 140만톤, 산업용 137만톤)에 이른다. 그리고 북한은 1995년에 566만톤을 산출할 수 있었으나, 홍수로 190만톤의 피해를 겪게 되어 376만톤을 생산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1996년에 388만톤이 더 필요한 데, 해외원조 및 수입으로 76만톤을 충당함으로써 312만톤의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북한은 주장하였다.

14) 「조선일보」, 1995.9.13.

또한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보고서¹⁵⁾에 따르면, 1996년 북한의 총곡물수요는 554.8만톤(식용 368.8만톤, 사료용 105만톤, 산업용 81만톤)이다. 그러나 1995년 총생산량은 407.7만톤에 불과함으로 1996년에 약 147.1만톤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해외로부터 43.4만톤(수입 15만톤, 원조 28.4만톤)을 확보하여 5월 현재 103.7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나아가 중국의 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1993년 350만톤, 1994년 300~320만톤, 1995년 250~260만톤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⁶⁾ 그리고 북한에는 아사자와 더불어 인육을 파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하였다.¹⁷⁾

그러나 중국의 또 다른 한반도전문가는 북한의 총식용수요를 하루 평균 1만톤, 연평균 365만톤 정도로 추정하였다.¹⁸⁾ 그리고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현재 북한의 식량부족량을 50~80만톤으로 추산하였고, 최대한으로 계산하여도 100만톤은 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그는 1996년 5월 북한 부총리 홍성남의 방중시 중국측이 50만톤 대

15) 「중앙일보」, 1996.5.27.

16) 「민족통일연구원 내부세미나」, 1996.11.4.

17) 이러한 견해에 대해 이민복(前 북한 농업과학원 연구원)은 북한의 곡물최저필요량은 400만톤 가량이 되며, 현재 북한 주민들은 '개인 폐기발 농사(60~150평)'와 '개인 장사'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내부세미나」, 1996.11.15.

18) 「민족통일연구원 내부세미나」, 1996.11.25.

북원조(유·무상 절반씩)를 약속하였으며, 북한 또한 국제시장과 대중 변경무역을 통해 50만톤 가량은 조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북한의 식량난이 어려운 고비를 넘겼으며, 북한체제 또한 안정적인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세종연구소의 이종석 박사팀은 북한의 식량수요 개념을 ① 한계수요(순식용외에 식량을 활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 활동이 정지되는 수요), ② 최저수요(순식용 및 최소한의 산업 활동이 가능한 수요), ③ 정상수요(순식용 및 정상적인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요)로 구분하였다.¹⁹⁾ 이 팀은 1996년 북한의 한계수요를 410만톤, 최저수요 550만톤, 정상수요 670만톤으로 제시하고, 1995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정곡상태 기준)을 260만톤(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으로 설정함으로써 1996년 북한의 식량부족량을 한계수요 기준 150만톤, 최저수요 기준 290만톤, 정상수요 기준 410만톤으로 평가하였다.²⁰⁾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표 2-2>와 같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1996년 중국의 식량지원 재개와 해외원조 및 수입 그리고 텃밭·폐기밭 등 비공식부문에서의 생산을 통해 한계수요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이 식량난으로 인해 붕괴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높

19) 세종연구소, 「북한의 경제난 실태와 전망」(96-01), pp. 8~13.

20) 북한의 식량부족량 추정에는 연간 수십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밭, 텃밭에서 생산되는 곡물량은 제외되어 있다.

지 않다.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발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상 수요량에는 최소한 200만톤 이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이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데 있어서 식량난 해결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 1996년 북한의 총곡물수급 실태

(단위: 만톤)

기관별 구 분	농촌경제 연구원	세계식 량계획	북한 당국	중국 전문가(1)	중국 전문가(2)	세종연 구소	통 일 원
총곡물수요	630	554.8	764		365	670	673 (감량시 578; 실제소비 량 489)
- 식 용	476	368.8	487			410	
- 사료용		105	140				
- 산업용		81	137				
1995 생산량	280	407.7	376	250		260	345
- 정상적생산량	430		566				
- 홍수피해량	150 (401: 저온피해)		-170				
부족량	350	147.1	388		50~80	410 (150)	328 (감량 233;실 제144)
도입량	148 (확보) 100 (비공식)	43.4	76		50(중국 지원) 50(원조)		110
절대부족량	100	103.7	312				218(감 량 123; 실제34)

2. 에너지난

북한은 에너지 부문에서도 자립정책을 추진해 왔다. 즉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자급자족을 제고 정책을 추구해 온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주탄중유'²¹⁾의 에너지 수급구조를 이루었다.²²⁾ 그러나 높은 에너지 자급율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북한의 수입총액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에 이르렀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산업시설의 상당부분이 구소련 및 중국의 지원과 경험에 의해 건설되었고,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 이들 두 국가에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에너지 자립정책은 구소련 및 중국에 '의존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²³⁾

1990년대 들어와 석탄증산의 애로와 수력발전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북한의 양대 에너지원 생산력이 부진한 가운데 소련이 해체되어 에너지 원조가 중단되고 중국이 경화결제를 요구하자, 북한은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그 결과 북한은 심각한 에너지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북한은 199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3

21) '주탄중유'정책이란 자력갱생의 폐쇄적 공업화정책에 의해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도 석유 등 수입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북한내 비교적 풍부히 매장된 석탄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정책을 의미한다.

22) 1980년대 이래 북한의 총에너지 소비에서 석유의 비중은 10% 내외를 유지하였으며, 주로 수송부문에 집중되었다. 최수영, 「북한의 에너지수급 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1~12.

23) 위의 책, pp. 6~7; 정우진, 「북한의 에너지 산업」 (서울: 공보처, 1996), pp. 13~17.

차 7개년계획 기간 동안의 에너지 생산량이 목표량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였다.²⁴⁾

원유도입 추세를 살펴보면, 1985년 260만톤, 1988년 316만톤에 달하였던 북한의 원유도입량이 1990년대에 들어와 감소하여 1995년에는 110만톤으로 축소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표 2-3> 참조). 구소련의 경우 과거 연 100만톤을 공급하였으나 1991년 이후 완전 공급을 중단한 상태이고, 중국 또한 내부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여력의 한계를 노정하는 동시에 국제가격(1991)²⁵⁾과 경화결제(1993)에 의한 청산방식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원유도입은 급격히 축소되었다. 이같은 원유도입의 감소는 특히 석유소비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수송부문에 심각한 애로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²⁶⁾

24) 조선로동당,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정형에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 「로동신문」, 1993.12.9. 북한은 동 계획기간중 석탄 생산 목표는 1억2,000만톤이었으나, 실적치는 1억710만톤이었으며, 전략량 목표는 1,000억 킬로와트였으나 실적치는 676억 킬로와트이었음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발표치도 허구로, 실제로는 각각 2,710만톤과 221억 킬로와트로서 목표치의 22% 수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홍순직, “북한의 에너지 산업,” 「통일경제」 (1996년 9월호), pp. 101~119.

25) 중국의 원유 수출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구 분	1987	1988	1989	1990	1991
대북한 원유 수출가격	63	63	60	58	126
원유의 평균 수출가격	115	98	113	142	131

자료: KOREA, 「북방통상정보」 (1993년 2월호).

26) 북한 당국은 각급 단위기관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 40%를 감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며, 그 결과 사회안전부 순찰차량도

<표 2-3> 북한의 국가별 원유도입 실적

(단위: 만톤)

수입국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중 국	114	116	110	110	105	83	102
러시아	50	41	-	-	-	-	-
리비아	-	-	20	20	10	8	8
이 란	92	98	22	22	21	-	-
계	265	245	189	152	136	91	110

자 료: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석탄생산량 또한 3차 7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인 1993년에 2,710만톤을 생산함에 따라 목표인 1억 2,000만톤의 23%에 머무르고 말았다. 그리고 1994년에는 2,540만톤을 생산함²⁷⁾으로써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등 전반적인 생산 시설에 대한 석탄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 결과 유류난과 더불어 산업, 수송, 민생 등 북한 경제전반에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북한의 발전량 또한 1995년에 230억kwh(수력 142, 화력 88)를 생산함으로써 1990년 277억kwh(수력 156, 화력 121)에 비

10%만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일보』, 1996.5.13.

27) 석탄공급의 감소는 기존 탄광의 장기채굴에 의한 심부화, 자본부족에 의한 채탄장비의 노령화, 신규 탄광개발의 곤란 등에 기인한다. 조동호, “북한의 조기붕괴 가능성과 돌발사태 대비방안,” (통일연수원 발표논문, 1996.8), p. 4.

하여 약 27% 감소하였다. 이 감소분의 약 77%는 석탄 공급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전력수요량은 연간 500억kwh로 추정되는데, 1990~95년 연평균 전력생산량은 245억kwh로 총수요의 50%에 머무르고 말았다.²⁸⁾ 그 결과 공장가동률이 40% 이하 수준에 맴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요컨대 북한은 원유공급의 중단과 석탄생산의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전력생산의 감소로 인해 공장가동과 운송부문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생필품난

북한의 경공업 낙후와 생필품 부족현상은 이미 1970~80년대부터 시작된 문제이다.²⁹⁾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1990년대에 들어와 소련과 사회주의진영이 몰락하자, 이들 국가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던 북한은 경공업 부진과 극심한 생필품난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의 경공업 및 생필품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북한의 경공업부문 중 조총련계 기업과의 합병·합작

28) 통일원,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서울: 통일원, 1996.11), pp. 230~231.

29) 북한의 경공업이 낙후되게 된 주요 원인은 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그에 따른 자본 및 노동 생산성의 저하 ② 자립경제의 경직성 ③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른 경제정책상의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태섭, “북한의 생필품난,”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pp. 71~75.

을 통해 운영되는 봉제공업을 제외한 여타부문의 생필품 생산 공장들은 10% 미만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³⁰⁾ 또한 북한의 주체과학원 학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³¹⁾ 북한당국이 1990년도에 공식적으로는 8.9억 미터의 천을 생산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3억 미터 밖에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생필품 부족상황 또한 매우 심각한 사정인 것으로 전하였다. 예컨대 최근 평양 시내 상점에서 북한돈으로 자유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은 미술공예품, 간단한 목공도구, 조야한 여성화장품 등 세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와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공책, 연필 등 학생용품과 치약, 화장비누, 세탁비누, 양말, 신발, 화학섬유피복 등 일용품 그리고 된장, 간장, 소금, 수산물 등 부식물 마저 최근에는 극히 제한된 양으로 배급하는 배급표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현품이 없어서 배급표를 가지고 못사는 경우도 왕왕 있으며, 배급표 공급날자가 지나면 그 배급표는 무효화된다. 그 결과 지금 북한에서는 비록 제한된 숫자의 생필품들이지만 암시장(농민시장: 최근에는 공개화된 장마당)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가격은 국정가

30) 북한의 경공업 생산은 1994년 전년대비 0.1%, 1995년 전년대비 4% 감소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1995년 북한 GDP 추정결과」 (서울: 한국은행, 1996), p. 6.

31) 중국의 북한전문가, “북한의 정치 경제” (미발표 논문, 1996.10).

격의 5~10배 이상되는 것이 많다(<표 2-4> 참조).

의류의 경우 내수용 생산부문은 설비 노후와 원자재 및 전력난 등으로 인해 질·양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주민들의 생계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피복비이다. 작업복의 경우 1인당 배급 기준량이 2벌이지만 실제로는 1벌 씩 배급되고 있으며, 동내의·양말·스타킹·속내의 등도 배급이 제대로 안돼, 암시장을 통해 비싼 값으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컬러 TV인데, 생산 규모나 기술 수준이 낙후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주류와 청량 음료의 경우, 열악한 곡물 사정으로 인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중국 변경무역을 통해 콩기름 등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식용유 또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육류 가공품의 경우 또한 수산물 증산을 통한 단백질 공급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탁비누는 가구당 연배급 기준량이 47개이나, 가성소다의 생산 부진으로 인해 세계 생산이 감소됨에 따라 실제로는 8개 정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표 2-4> 북한의 주요 생필품 가격

품 목	단 위	91년 국정가격	91년 암거래 가격	95년 가격	96년 5월가격
치 약	1개	1원 40전	7~8원		5원
나이론양말	1족	1원 50전	5원	20~25원	50원
밀크 로션	1병	2원	4원		200원
운동화	1족	3원 40전	15~20원	200원	75~80원
양 복	1벌	120원	300~400원		1,000~1,100
소 주	1병	2원 40전	20원	30원	80원
사이다	1병	1원 20전	5원	30원	
담 배	1갑	1원 40전~ 1원 80전	20원	20~30원	40~50원 (중국산)
컬러TV	1대	1,200~1,500원	20,000원	35,000~ 40,000	12만원 (일본산)
흑백TV	1대	400~600원	4,000원	8,000원	7,000원 (중국산)
라디오	1대	100원	750원		
녹음기	1대	260원	800원		
카메라	1대	400원	1,000원		
자전거	1대	550~800원	4,000원	7,000원	7,000원

자 료: 한국개발연구원 편, 「북한경제지표집」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6.6) p. 191; 「북한의 정치·경제 현황」 (미 발표 논문, 1996.10); 「통일한국」 (1996.7), p. 30.

4. 외화난

북한은 1980년대 들어와 무역제일주의를 강조하고 대외무역 활성화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따른 품질 저급화, 공업생산 침체 등 내적 요인과 사회주의 시장 상실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해 북한의 무역량은 1988년을 분기점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중·소 무역에 있어서 구상무역의 단계적 폐지, 청산결제에서 경화결제로의 전환 등은 북한의 대외무역 발전에 있어 결정적 장애요인이 되었다. 그 결과 북한의 무역 규모는 1988년 52.4억 달러에서 1994년에는 약 40% 수준인 21.1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북한의 무역수지 또한 1990년대에 들어와 연평균 5~7억 달러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표 2-5> 참조). 이에 북한은 무역정책에 있어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³²⁾

32) “이제는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시장을 기본 대상으로 하던 무역정책을 자본주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김일성, “현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1992.12.14),”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6.

<표 2-5>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연 도	수 출 (A)	수 입 (B)	무역총액 (C=A+B)	무역수지 (A-B)	GNP (D)	무역의존도 (C/D)
1988	20.3	32.1	52.4	-11.8	206.0	25.4
1989	19.5	28.5	47.9	-9.0	240.0	20.0
1990	12.6	18.2	30.9	-5.6	231.0	13.3
1991	9.5	16.4	25.9	-6.9	229.0	11.3
1992	9.2	15.5	24.7	-6.4	211.0	11.7
1993	9.4	15.4	24.8	-6.0	205.0	12.1
1994	8.4	12.7	21.1	-4.3	212.0	10.0

자 료: 1989년까지는 통일원, 「남북한 경제지표」, (1993); 1990~93
 년은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1994년은
 한국은행, 「1994년 북한 GNP 추정결과」, (1995).

북한은 무역 적자와 더불어 구소련의 원조 중단,³³⁾ 중국의
 경화결제 요구, 핵무기 개발의혹에 따른 서방국가의 대북 경제
 제재조치 지속, 김일성 사후 조총련의 송금 감소 등으로 인해
 외화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1977년부터 대외부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으
 며, 1985년부터는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
 과 총외채액이 누적되어 1995년 현재 북한의 총외채액은 118.3
 억 달러로 추정되며, 경상 GNP 대비 외채비율이 50%를 넘게

33) 구소련으로부터의 경제원조는 1987년 이래 중단되었다. U. S. 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cs (1988).

되었다. 총외채 중 절반 이상이 구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부채이고, 서방권 외채는 이자 포함 40억 달러로 추정된다. 그리고 외채상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총외채에 대한 수출비율 또한 1,000%를 초과하여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표 2-6> 참조).

<표 2-6> 북한의 외채현황

연 도	총외채	총외채/GNP(%)	총외채/수출액(%)
1975	21.0	22.5	254.5
1980	34.6	25.6	212.6
1986	40.6	23.3	299.5
1990	78.6	34.0	423.2
1991	92.8	40.5	918.8
1992	97.2	46.5	952.9
1993	103.2	50.3	1,011.8
1994	106.6	50.3	1,269.0

자 료: 통일원, 「남북한경제지표」 (1993); 한국은행, 「1994년 북한 GNP추정결과」 (1995).

이에 따라 현재 북한의 대외신용도는 170개국 중 167위를 기록하게 되었고,³⁴⁾ 서방채권단이 북한의 해외자산 압류를 선언함으로써 북한은 경제회복에 필수적인 해외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³⁵⁾

34) 「세계일보」, 1995.1.8.

35) 남궁 영, “북한경제의 특성 및 추세,” 「통일환경론」 (서울: 오름, 1996), pp. 290~294.

제Ⅲ장 북한의 경제정책 현황: 자력갱생과 도입정책

북한은 앞에서 언급한 4대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3년 12월 당 중앙위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조정기(1994~96)를 설정하였다. 이후 북한은 대내적으로 '고난의 행군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자력갱생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정책을 지속하되,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차원에서 대주변4국 '유인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경제적 차원에서는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의 활성화 및 식량원조 확보, 외자 유치, 중유 및 경수로 도입 등과 같은 '도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 농업제일주의와 식량원조 확보정책

가. 대내정책

첫째, 1994년 12월 19일 북한은 평양 만경대구역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개편한데 이어, 평남 숙천군내 20여개 협동농장을 통합하여 「군농업연합기업소」를 설립함으로써 협동농장의 국영농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적 작업을 추진하였다.³⁶⁾

둘째, 북한은 농업에도 독립채산제 및 2중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생산수단의 합리적 이용과 더불어 농업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향상시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³⁷⁾

셋째, 1996년에 들어와 북한은 「분조도급제」³⁸⁾를 북한 전지역에 걸쳐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64년부터 시행해온 「분조관리제」와는 생산물 분배방식에 있어 다른 방식인 것으로 평가된다.

나. 대외정책

첫째, 1995년 5월 북한은 이성록 국제무역촉진위원장을 일본에 파견, 일본이 보유중인 쌀 잉여분을 일정량(60~80만톤) 일

-
- 36) 김일성은 「사회주의 농촌테제」 발표 30주년 기념연설을 통해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일성,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기치높이 농촌문제의 중국적 해결을 위하여(전국 농업대회에 보낸 서한, 1994.2.24),” 「로동신문」, 1994.2.25.
- 37) 북한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내적으로 협동농장의 국영농장으로의 전환, 군단위 협동농장을 국가기업소와 연계하여 농업연합기업소로의 개편, 농업연합기업소 및 그에 속한 국가기업소 및 국영농장들의 독립채산제 운영 및 2중 독립채산제 실시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로동신문」, 1994.2.25.
- 38) 분조도급제란 분조의 규모를 종전의 10~25명으로부터 7~8명으로 줄이고, 생산목표를 최근 3년간(1993~95) 평균수확고와 1993년 이전 과거 10년간의 평균수확고를 합하여 나눈 평균치를 1996년 생산목표치로 정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고, 남은 생산목표 초과물(잉여생산물)을 분조원들이 공동분배하거나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김경일(북경대 동방학부 교수)의 “최근 북한의 경제개방 실태분석” (「민족통일연구원 내부세미나」, 1996.7.31); 「조선신보」, 1996.10.24.

정기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 쌀도 ‘아무런 전제와 정치적인 조건없이 원조하거나 대여한다는 제의가 있으면 검토하고 싶다’³⁹⁾고 밝힘으로써 곡물원조를 국제사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그 결과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쌀 15만톤 무상지원을 확보하는 등 총110만톤 가량의 곡물을 확보하였다.⁴⁰⁾ 한편 북한이 일본 및 한국 등에 식량원조를 요청하게 된 것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 경제원조 중단 또는 감소,⁴¹⁾ 식량난의 누적, 농업생산력의 정체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수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1995년 북한은 수재복구를 위해 국제기구(WFP, IRC 등)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북한은 1995년 7~8월의 집중호우(최고 600mm 이상)로 인해 농작물뿐만 아니라 발전시설, 도로, 철도,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⁴²⁾ 이에 유엔조사단은 이재민 50만명

39) 「일본경제신문」, 1995.5.27.

40) 1995.2 태국: 쌀 30만톤 구매(8월 말까지 13만톤 선적), 1995.3 미국 바틀렛사: 옥수수 5만4천톤 구매, 1995.6 한국: 쌀 15만톤 무상지원 (10월 초 모두 선적) 1995.8. 중국: 곡물10만톤 1995.6/1995.9 일본: 쌀 30만톤(무상 15만톤, 유상 15만톤) + 유상 20만톤 등.

41) 북한은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연간 100만톤의 식량을 원조 내지 우호가격 등에 의해 공급받아 왔으나, 1994년 중국 남부지역의 대규모 홍수로 인해 24만톤 밖에 도입하지 못하였고, 1995년 1/4분기에는 1.2만톤 정도만 수입하게 됨에 따라 심각한 식량난에 처하게 되었다. 통일원, 「'95년도 하반기 북한경제동향」, pp. 30~31.

42) DPRK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Report, Sep.26.1995.

에 대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짓고, 식량·의류·의약품 등을 공급하기 위한 총1,571만 달러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전세계 각국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⁴³⁾

셋째, 북한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경작지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예컨대 송호경 캄보디아 주재 북한대사는 벼 경작지 2천ha 사용허가를 캄보디아 당국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⁴⁴⁾

넷째,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식량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홍성남, 김윤혁 등 부총리급을 방중케 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 1996년 1~10월 사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류는 2,898.9만 달러, 밀가루 등 제분공업제품 7,682만 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3.5배와 3.4배 증가하였다.⁴⁵⁾

다. 평 가

북한 당국이 내부 취약성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정치적 부담을 무릎쓰고 인접국가와 국제사회에 식량난과 수재복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배경에는 수재의 피해가 실제적으로 막대할 뿐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안정적 출범과 장기 지속을 위해

43)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세계각국이 약 2700만 달러 정도의 구호물자와 지원금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일보」, 1995.12.20.

44) 「조선일보」, 1995.9.26.

45) 중국해관총국, “북한의 수출입 통계,” 「중앙일보」, 1996.12.11.

식량난의 원인을 수재에 돌림으로써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외부지원을 통해 유효성을 증대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북한의 식량난은 분조도급제⁴⁶⁾ 및 식량원조 도입정책으로도 타결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이 농업집단화에 따른 능력의 저하와 비효율성 문제를 분조도급제로 다소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체농법 즉 김일성이 제시한 집단농업경영원칙의 고수와 비료, 농약 등을 비롯한 농기자재 부족의 문제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에게 곡물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중·일과 태국, 미국, 베트남, 호주 등인데 미국의 대북 경제 및 한·미·일 공조체제의 지속, 태국의 홍수피해, 북한의 경화결제 능력 미약, 남북관계의 경색 등으로 인해 북한에게 장기간 일방적 식량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을 제외하곤 없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식량난을 해소하려면 집단농장의 점진적 해체, 다수확 품종 및 병충해 방지 농약의 개발, 비료 증산, 다락밭에 대한 조림사업 전개를 통한 산사태 방지와 수리시설의 확보 등 농업개혁이 필요하다.⁴⁷⁾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식량난의

46) 분조도급제는 국가헌납분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도입초기 농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으나, 높은 목표량과 비료·농약의 부족으로 인해 성과가 매우 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경호씨 일가족 기자회견,” 『중앙일보』, 1996.12.18.

47) 김용호,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5), p. 10.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다. 북한의 식량난은 자급자족이 거의 불가능한 농업의 구조적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관계개선과 경협을 통해 외화가득율이 높은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부족한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정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2. 증산·절약과 증유 및 경수로 도입정책

가. 대내정책

첫째, 북한의 에너지난 해결책은 제3차 7개년계획 시행 초기 연도인 1987년에 제시된 열관리사업의 중점방안에서 이미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기술혁신을 통한 저열탄, 초무연탄용 보일러 및 태양에너지·풍력·지열 등 자연에너지 개발과 폐탄가스의 이용 등 에너지원의 다양화, 수입 에너지의 소비 극소화 및 국내산 연료의 대체노력 강화, 열설비의 예방보수체계 확립 및 열관리사업의 물질적 토대 강화, 열관리사업과 대중운동과의 연계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다.⁴⁸⁾

둘째, 1994년에 들어와 북한은 기존의 노후화된 발전설비의 철저한 정비 보수, 발전설비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확대, 동력설비의 공회전 방지 등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48) 정우진, 「북한의 에너지 산업」 (서울: 공보처, 1996), p. 134.

금강산발전소(수십만kw)·예성강발전소(9만kw)·금야강발전소(10만kw)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 및 중소규모 발전소(100~1000kw)건설,⁴⁹⁾ 그리고 폐열을 이용한 중소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적극 독려하였다.⁵⁰⁾

셋째, 1996년 김정일은 에너지난 해결을 위하여 ‘현시기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원료와 연료, 동력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석탄공업부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선행부문’으로 규정하였다.⁵¹⁾ 이에 북한은 에너지 총소비량 중 70% 이상을 석탄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석탄부족 해결을 위해 고열탄의 저열탄으로의 대체와 폐가스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에너지 절약운동의 대중화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정전제, 순번정전제, 전등반환 운동, 낮전등 안쓰기 운동 등 에너지의 효과적 사용과 절약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49) 김일성,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과 수력발전소건설을 다그칠데 대하여(1994.6.14),” 「김일성저작집 44」, pp. 459~461.

50) 「로동신문」, 1994.8.1.

51) 「민주조선」, 1996.3.19.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김정일 교수와 이창주 교수의 증언도 이와 일치한다. 북한은 경제난의 원인을 에너지난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난보다 에너지난을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나. 대외정책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북·미 기본합의문」 체결을 통해 에너지난 해결과 대외 경제관계 개선의 단초를 만들었다.⁵²⁾ 북한은 핵동결을 약속하는 대신, 대체에너지(중유) 공급과 경수로 지원이라는 경제적 실리와 대미 직접대화 채널(연락사무소) 확보라는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첫째, 북한은 기존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1995년에 15만톤, 1996년 이후부터 경수로 완공 시점인 2003년까지 매년 50만톤의 중유 공급을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았다. 이같은 중유 확보는 북한의 발전용 중유투입량이 1989년에 23.2만톤, 1994년에 14.4만톤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에너지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북한은 2003년 이후에 완공될 1000Mw급 경수로 2기를 통해서도 전력난을 상당수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북한은 동북아에서의 미·중 대립 전략구도를 활용하여 중국으로부터도 다시 에너지 지원을 약속받았다. 1996년 5월 부총리 홍성남은 방중을 통해 원유 130만톤, 석탄 250만톤의 향후 5년간 지원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진다.⁵³⁾ 물론 중국은 북

52) 북한은 김정일의 리더십을 부각시키기 위해 「북·미기본합의서」 체결과 클린턴 대통령의 「담보서한」 확보 등을 그의 영도력에 의한 것으로 선전하였다. 북한외교부 대변인 보도(1994.10.20), 한민전 중앙위의 지지성명(10.29), 조총련중앙상임위의 지지성명(10.30), 최고사령관 추대 3주년기념보고대회에서의 군총참모장 최광 보고(12.23) 등.

53) 「조선일보」, 1996.7.19.

한에게 중국식 개혁·개방정책 수용을 강력히 요구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 평 가

자력갱생적 에너지 절약·증산 정책은 북한의 에너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KEDO의 중유 공급량 또한 북한의 원유난을 근본적으로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1995~96년 거둬들인 홍수로 인해 일부 발전소 시설이 유실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에너지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북한으로서는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도입선의 다변화 차원에서 대미 중유도입정책과 대중 원유원조 확보정책을 지속하되, 대내적으로는 석유 등 에너지원의 다양화⁵⁴⁾를 꾀하고, 해외 자본과 기술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석탄 생산 증대⁵⁵⁾와 전반적인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일이 필요하다.⁵⁶⁾

54) 에너지원의 다양화란 자연 에너지 개발이나 저질탄 이용 확대 등 지엽적,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석유, 가스 원료탄의 수입과 소비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다양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55) 갱도의 심부화, 장비의 노후화로 점차 악화되는 채탄 조건을 개선,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석탄생산에서 벗어나 합작 개발 등의 형태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56) 정우진, “북한의 체제와 에너지난,”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p. 69.

3. 「8·3 인민소비품」 증산운동과 외자 도입정책

가. 대내정책

첫째, 북한은 생필품난을 해결하기 위해 유희 노동력과 자투리 원자재를 투입하여 일상 소비품을 생산하는 '8·3인민소비품 생산'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⁵⁷⁾ 그리고 북한은 '8·3인민소비품 증산운동'의 성과를 김정일의 경제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다.⁵⁸⁾

둘째, 북한은 '맹산군 따라배우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중앙 정부의 지원없이 지방 자체의 노력에 의한 인민소비품 생산을 촉구하고 있다. '위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로 해낸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생산정상화 투쟁을 전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의 지방공업에 관한 연설⁵⁹⁾

57) 북한은 생필품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당활동의 최고원칙'이라고 천명한 이래, 경공업 발전에 정책적 비중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후 북한은 1984년 '8·3 인민소비품 증산운동' 전개, 1989년 '경공업의 해' 설정, 1989년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1989~91)'제시, 1990년 '전국경공업대회' 개최, 1993년 '경공업 제일주의' 채택 등을 통하여 왜곡된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주민생활품 공급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58) 북한은 「8·3 인민소비품 증산운동」 10주년(1994.8.3)을 맞이하여 증산운동이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10년 동안 소비품 생산은 3.5배 성장했으며 소비품을 생산하는 작업반, 가내작업반, 부업반이 46,500여개로 증가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4.8), pp. 16~18.

59) 김일성,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25주년을 기념하여 ‘김일성 유훈’관철 차원에서 군 단위 지방공업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나. 대외정책

첫째, 북한은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외자도입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제정·보완해 오고 있다.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정책을 세웠으나, 외국인 투자를 유도할 법적·경제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질적 투자유치를 확보하지 못했었다. 단지 제일 조총련계 기업인들의 투자만이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조합영사업 또한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⁶⁰⁾ 이에 북한 정부는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외자유치를 위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제정·개정하고 있다. 북한은 1992년 10월 외국인투자 유치관련 기본 모법인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이래 1996년 8월 말 현재까지 총 49개의 외자법령을 공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부표 4> 북한 외국인 투자관련 법체계 참조).

일으키자(1970.2.27),”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37~71.

60) 조조합영사업의 주요 실패원인으로는 ① 북한 당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 ② 합영사업에 대한 자기중심적·편의주의적 사고와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신지호, “조조합영사업의 교훈,” 「월간 통일경제」 (1996년 9월호).

둘째, 북한은 나진·선봉 지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담당 기구들을 설립하였다. 비정부조직의 성격을 갖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산하조직인 「조선경제개발총회사」(Korea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정무원 산하 「대외경제위원회」에 나진·선봉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경제개발총국」을, 현지에는 지방조직인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나진·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가 겸임)을 각각 설립하였다.

셋째, 북한은 나진·선봉지대 투자설명회를 독일, 미국, 홍콩, 태국, 대만, 일본, 중국 등에서 총 10여회 이상 개최하였고, 최근에는 나진·선봉 현지에서 「유엔농업개발기구」(UNIDO), 「국제연합개발계획」(UNDP)과 함께 「국제투자 포럼」(1996.9.13~15)을 개최함으로써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천명하였다.⁶¹⁾ 특히 이 포럼에서 북한은 1996년 6월까지 49건, 3억5,000만 달러의 투자가 계약되어, 그 가운데 22건 3,400만 달러가 투자 실행되었음을 밝혔다.⁶²⁾ 그리고 동 포럼을 통하여 북한은 8개 사업 2억 8,500만 달러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0개 사업 8억 3,450만 달러 상당의 투자의향서를 교환함으로써 총 38개 사업 11억 1,950만 달러 규모의 계약 및 합의서 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⁶³⁾

61) 이찬우, “나진·선봉지대 투자 포럼의 결과와 전망,” 「통일경제」 (1996년 10월호): 박순성,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9).

62) 임태덕, “나진·선봉지대의 개발 현황과 개발 계획” (나진 선봉투자 포럼 배포자료, 1996.9.13).

넷째, 북한은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기구인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RADP)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북한은 UNDP가 주관하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UNDP가 개발방식을 마스터 플랜에 따른 공동 개발에서 국가별·단계별 개발로 전환함에 따라 긍정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다. 평 가

생필품난을 해결하기 위한 북한의 '8·3인민소비품 증산운동'과 외자 도입정책 또한 내부자원의 고갈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북한은 그동안 경공업부문 근로자들의 노력으로 많은 경공업 공장들을 현대화 또는 새로 건설함으로써 양질의 인민소비품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였으며, 각 지방의 산업공장(천·신발·방직·식료 등)들을 자력으로 가동할 수 있게 하였음을 주장하였다.⁶⁴⁾ 그러나 북한은 군수산업을 위한 중공업 우선정책⁶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생필품 증산을 위한 구체적 투자나 후속조치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생필품난은

63) 「조선중앙통신」, 1996.9.19.

64) 「조선중앙방송」, 1996.6.2.

65) 북한은 투자재원의 80%를 중공업에 투입함으로써 산업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GNP의 25%를 군사비(연간 56.6천만 달러)에 투입하고 있다. 「内外通信」 주간판 제1035호, p. B3.

더욱 심해지고 있다.⁶⁶⁾ 치약 대신 소금을 사용하고, 비누는 양젓물과 생선기름을 원료로 집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진다.⁶⁷⁾

제네바 합의 후 외국 및 한국 기업의 대북한 진출 현황 또한 아직 그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 일본, 홍콩 등 8개국 150여개 업체가 북한을 방문하여 50여건의 합의서 또는 계약서를 교환하였으나, 실행에 들어간 것은 AT&T사의 북·미 직통전화 개통, 중국기업의 나진·원정리 도로공사, 미국교포의 나진호텔 건설 등 10건 미만이다. 또한 한국정부의 ‘대북 경험 활성화 조치’(1994.11)에 따라 한국의 10여개 업체가 평양·남포 지역 및 나진·선봉 지역을 방문하여 총 22건의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사된 것은 대우의 남포 경공업공장 운영과 한국특수선의 나진·부산간 직항로 개설 등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⁶⁸⁾ 요컨대 북한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방 및 한국기업의 본격적인 대북진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외자도입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3가지 측면에

66)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비교」 (서울: 통계청, 1996.11), 북한에서 16인치 컬러TV 1대값(1992년 기준)이 495,450원으로 한국(238,000원)보다 비쌀 뿐만 아니라, 암시장(7,340,000원)에서는 근로자 월평균임금(70원)을 20년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가격이다.

67) “김경호씨 일가 기자회견,” 「중앙일보」, 1996.12.18.

68) “한국 및 외국기업의 대북진출 현황(1996년 6월말 현재),” 「통일경제」 (1996년 8월호).

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노무관리·경공업 위주의 투자유치 등 투자환경의 개선이 있어야 하며, 남북관계에서는 외자유치를 위해 대화와 긴장완화의 개선이 있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채무 이행을 통한 대외신용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같은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외국 및 한국 기업의 본격적인 대북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4. 수출증대 운동과 무역 확대정책

가. 대내정책

첫째, 북한은 1994년 김일성의 신년사를 통해 대외무역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로 시장개혁, 대외신용도 및 품질 제고, 수출품 생산기지 확충, 가공무역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⁶⁹⁾ 이후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일본 외에서방 선진국은 물론 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거래조건이 좋은 동남아 국가 등 개발도상국가들과의 교역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⁷⁰⁾

69) 「로동신문」, 1994.1.1.

70)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진 조건에서 이제는 그런 나라(월남 등 동남아 세아 10개나라)들과 무역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경공업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동남아세아나라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팔고 그 나라들에서 우리 나라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사와야 합니다.”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1994.7.6),” 「김일성저작집 44」, p. 484.

둘째, 북한은 수출잠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역별 현지실정에 따라 수출생산기지를 건설하였다. 지방별 육성 수출품으로는 평양의 완구제작품, 함경남도의 비금속 제품, 평안남도의 금·은·아연 등 지하자원, 평안북도와 황해남북도의 피복가공 등을 들 수 있다. 동시에 유망 수출품은 강재·유색금속·기계설비·시멘트⁷¹⁾·돌가공품·비단·고려약 등인데,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수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⁷²⁾

셋째, 북한은 신무역체계를 도입하여 무역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과거 북한의 무역상사들은 생산공장과 별도로 설립되어 수출상품 반출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이에 북한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무원의 위원회나 부 또는 도 행정경제위원회 등이 무역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신무역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원자재나 반제품의 수출은 외화가득율이 낮고 자원이 고갈되어 성장잠재력이 감소되므로, 임가공무역·되거리무역(중개무역)·변경무역 등 다양한 무역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71) 김일성은 시멘트를 많이 생산하여야 외화(연평균 1.8~3억 달러)도 벌고, 건설도 힘차게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44』, pp. 480~482.

72) 장보인, “북조선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와 남북 정치경제의 교류·협력,” 『김정일체제의 대내외정책과 남북관계』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995.10), p. 36.

나. 대외정책

첫째,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기초하여 대미 경제관계 개선과 대일 수교회담 재개의 돌파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1995년 1월 20일 미국으로부터 대북경제제재 1단계 완화조치⁷³⁾를 받아냈으며, 1995년 3월 30일 일본의 연립3여당 대표단과 「수교회담 재개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관계개선 및 전후 배상금 지불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모색하였다.⁷⁴⁾

둘째, 북한은 무역난 및 외화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한적 대외개방정책을 지속하였다. 1995년 상반기 북한은 MCI, GM 등 11개 미국기업 대표단을 초청하여 나진·선봉지역의 통신망 설치를 비롯한 각종 분야의 경협 가능성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아·태평화위 대표단(단장 이종혁) 및 해외동포위원회 대표단(단장 전경남) 등을 방미케 하여 구체적인 경협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또한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에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도로망 및 통신망을 확충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⁷⁵⁾ 그러나 나

73) 이 조치는 상대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언론기관 사무소 개설, 미 국내 북한자산 동결해제,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1950년 대북제재를 실시한 이래 처음 있게 된 일이다.

74) 허문영, “북·일관계 전망과 대응정책 방향,”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정책연구」 (1995.2), pp. 41~54.

75) 이배석,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와 동북아시아경제협력” (심양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북한측 논문, 1995.8.16~18), ① 국내지역

진·선봉지역에 대한 서방세계의 투자는 미약한 실정이다.⁷⁶⁾ 한편 독일이 동아협회 평양사무소의 설치를 적극 추진중이고,⁷⁷⁾ 네덜란드의 ING은행이 1995년 9월 평양에 서방은행으로서는 최초로 사무소를 개설하였다.⁷⁸⁾

셋째, 북한은 수출상품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구조를 살펴보면 아직 광산물 등 1차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일본, 독일, 한국 등과 섬유 등 경공업 분야의 위탁 가공무역이 증가하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다.⁷⁹⁾

넷째, 북한은 무역대상국의 다변화를 또한 추진하고 있다. 국가별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교역국가였던 러시아·동

과 나진·선봉지역을 구분하는 약 90km의 경계올타리 공사완료, ② 나진-원정-훈춘(중국)을 잇는 도로망 건설완료 및 원정교를 통한 중국과의 통행 재개, ③ 나진-원장간 광섬유케이블공사 완료, 중국 측 통신망과 연결, ④ 남양-확송간 철도전기화 공사 거의 완료, ⑤ 비파관광지 도로공사 거의 완료, ⑥ 청진-회령간 도로건설 공사, 나진항 세관건설공사, 국제통신센터건설 공사 진행중임.

76) 북한에는 1994년 현재 총 149개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나, 이중 90% 이상인 136개 기업이 조총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원, "95년 국감자료" 「중앙일보」, 1995.9.26. 재인용. 한편 나진·선봉 지역과 관련하여 북한은 1996년 1월말 현재 외국기업과 약 3억 5천만 달러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투자금액은 2천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内外通信」, 주간판 제1003호 (1996.5.2), p. D3.

77) 「조선일보」, 1995.8.14.

78) 「조선일보」, 1995.11.13. 프랑스주재 북한대표부 경제담당 참사관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200여 조사단이 북한을 다녀갔고, 미국의 코카콜라, GM 등이 이미 투자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79) 남북한 위탁가공무역은 1991년 3만 달러, 1992년 96만 달러, 1993년 799만 달러, 1994년 2,856만 달러, 1995년 4,723만 달러, 1996년 10월말 현재 5,260만 달러로 급속히 신장되고 있다.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동향」, 제64호.

구 등 구사회주의권과의 무역이 크게 감소된 반면, 일본을 포함한 서방권 국가들과의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은 무역총액의 50% 이상을 중국, 일본 2개국에 편중하고 있어 아직은 무역 다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군부의 국제적 무기밀매를 통해 외화난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 인민무력부는 직할 수출입회사인 「용악산 총회사」를 통하여 미사일 연료를 수출하다 적발되었다.⁸⁰⁾ 인민무력부는 또한 1995년 7월 홍콩 부근의 중국 남부 최대도시인 광주에 직할무역상사인 「매봉상사」를 설립하여 파키스탄·캄보디아 등의 반군과 홍콩 등의 범죄조직에 무기를 밀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¹⁾ 이같은 북한의 무기밀매는 중국의 군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⁸²⁾ 1996년 중국의 대북한 무기·탄약 수출은 총 346만 달러로 전년도 99.6만 달러에 비해 247%나 늘어났는데,⁸³⁾ 이는 북한의 무기밀매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80) 1996년 3월 북한은 파키스탄 「우주대기권 연구위원회」 앞으로 미사일 발사 연료인 과염화 암모니아 15톤을 수출하려다 대만 高雄港에서 적발·압수당했다. 4월에는 또한 홍콩에 정박중이던 파키스탄행 중국 화물선에서 「용악산 총회사」 소유의 과염화 암모니아 10톤을 적발당했다. 「동아일보」, 1996.12.13.

81) 「동아일보」, 1996.9.11. 또한 북한은 8월에 대구경 대포 10문, 자주포, 원거리 포등 총 603톤의 전략무기물자(약 10억원 상당)를 시리아로 수출하기 위해 홍콩항에 불법 반입하다 압수당했다. 「동아일보」, 1996.9.15.

82) 「중앙일보」, 1996.6.24.

83) 중국해관총서의 통계,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동향 분석,” 「한겨레신문」, 1996.12.11.

여섯째, 북한은 외화획득을 위해 비정상적 무역활동도 서슴치 않고 있다. 골동품 판매,⁸⁴⁾ 마약 생산·판매,⁸⁵⁾ 위조지폐 제조,⁸⁶⁾ 외교관 밀수⁸⁷⁾ 등이 그 실례이다.

다. 평 가

북한은 지방무역이 시작된 1976년 이후 20여년 동안 지방무역액이 85배나 성장했으며, 유색금속·비금속·경공업부문 등 각 부문에서 5백여개에 달하는 수출품생산기지를 설립하여 50여개 국가에 300여종의 상품을 수출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⁸⁸⁾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1995년 북한의 총무역액은 20.5억 달러로 전년도 21.1억 달러보다 2.4% 줄어들었다. 국제신용도 또한 외채총액이 116억 달러로 증가되어, GNP의 49.8%에

84) 삼국시대에 제작된 반가사유상이 1백만 달러에 매매된 것을 비롯하여, 상당 정도의 골동품 판매가 북경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1996.9.7; 1996.9.30.

85) 북한은 함경도 등지에서 연 40톤의 양귀비를 재배생산하며, 1993년 8월부터 연 100톤 아편정제능력을 갖춘 나남제약공장을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1996.10.9.

86) “북한은 위조달러 제조공장?” 「뉴스위크」 (한국판), 1996.6.12; 한편 북한은 최근 조총련회사를 통해 최신 위폐감별기를 대량 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일보」, 1996.10.16.

87) 1996년 5월 4일 탄자니아는 상아밀수 혐의로, 1996년 7월 스웨덴은 담배밀수 혐의로 각각 북한 외교관 3명을 추방하였다. 「서울신문」, 1996.5.20; 「조선일보」, 1996.8.23.

88) 「조선신보」, 「内外通信」, 제10382호 (1996.12.18). 재인용.

달하게 됨에 따라 세계 최하위로 평가되었다.⁸⁹⁾ 그 결과 해외 차관 도입의 길도 거의 막혀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GNP 대비 무역의존도도 1994년보다 오히려 0.8% 하락하여 북한 무역의 폐쇄성을 입증하였다.

한편 1995년 한국은 북한의 3번째 교역국가가 되었다. 금년 상반기 남북한 교역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하였다. 향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남북한교역이 차지할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996년 4월 조지 워싱턴대 세미나에 참석한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은 무역형태의 다양화와 자본주의 시장으로의 다변화 등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거듭 천명하였다. 그리고 많은 북한의 대외관계 일꾼들이 나진·선봉활성화와 무역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북한 최고 지도부의 전략적 방침이 실용주의적으로 변경될 때, 대외무역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의 제한적 대외경제개방정책 성과를 실패로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정리해 볼 때, 북한은 당면한 난관인 식량난·생필품난·외화난·에너지난을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 및 ‘고난의 행군정신’의 강조를 통하여,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차원에서 대 주변4국 ‘유인외교’와 경제적 차원에서 ‘도입정책’

89) 한국개발원, 「북한의 현상황에 대한 평가와 남북한관계의 변화전망」, 「조선일보」, 1996.7.13. 재인용.

을 통하여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내부 자원의 고갈 그리고 인프라 등 투자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경제난의 근본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Ⅳ장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 ‘주체형 대외개방’ 노선

북한이 4대난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외경제정책은 크게 3가지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급진적 개혁·개방,⁹⁰⁾ 소극적 개혁·적극적 개방, 폐쇄적 고립노선⁹¹⁾이 그것이다. 현재 북한 당국은 극단적 정책을 선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소극적 개혁·적극적 개방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말해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공고화를 위해 유효성과 연대성을 증진시키려고 했던 김일성 사후의 정책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⁹²⁾

북한은 경제난을 해결하고 체제안정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데올로기 보다 경제적 실리에 비중을 둔 정책노선을 더욱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점차 ‘자주형의

90) 급진적 개혁·개방정책은 북한의 자력갱생정책 및 폐쇄체제와 기본적으로 모순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개혁세력의 주축인 군부의 합리적 신진세력과 기술관료의 연합집단에 의해 정권대체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 결과 개발독재형의 정권이 등장함으로써 결국 북한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91) 폐쇄적 고립노선은 단기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생활고에 따른 주민 폭동 및 군부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92) 그러나 북한의 현 경제난이 정책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구조적 변화없는 소극적 개혁정책’으로서는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력갱생 경제발전 노선」에서 「주체형의 대외개방 경제발전 노선」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자주형의 자력갱생 경제발전노선이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정책’·‘중공업 우선정책’·‘군사-경제 병진정책’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⁹³⁾ 이 같은 자력갱생 노선하에서 대외경제부문은 단지 경제체제내의 부수적·보완적 부문으로 간주되었고, 무역은 계획경제 수행상 필요한 자본재와 기술도입 등의 수입을 가능케 하는 보조수단으로 추구되었다.⁹⁴⁾

그러나 북한은 「3대제일주의」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1994년부터 「주체형의 대외개방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대제일주의는 ‘중공업 우선정책’으로부터 ‘경공업 우선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대외무역 보조정책’으로부터 ‘대외무역 우선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경제 병진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았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정책’에 대한 주장 또한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자주형의 자력갱생 노선’으로부터 ‘주체형의 대외개방 노선’으로의 전환은 경제발전 노선 자체의 변화라기 보다는 체제위기 상황하에서 북한 당국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제발전 노선 내의 변화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93) 통일원,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5), pp. 140~144.

94)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575; 홍승은, 「자립경제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pp. 264~265.

따라서 김정일은 권력엘리트(당료)와의 정책연합을 통해 대내통제정책⁹⁵⁾을 강화하여 체제안정을 도모하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엘리트(경제관료)⁹⁶⁾와의 정책연합을 통해 대외 개방정책을 더욱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⁹⁷⁾ 북한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대내적으로는 이데올로기적 통제강화를 통해 체제통합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제한적 경제개방을 확대하여 경제난을 타개하는 ‘주체형 대외개방’노선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계획경제 틀을 공고히 유지하되, 무역을 비롯한 대외경제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김정일 정권이 식량난·에너지난·생필품난·외화난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정책을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95) “사회주의국가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제문화적 교류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동시에 이 과정에 부르조아 반동사상과 썩어빠진 부르조아 문화와 생활풍조가 침습해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조선중앙방송」, 1995.6.22.
- 96) 각 분야에서 점차 세대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수의 전문기술관료가 중견간부로 충원된 점도 북한의 정책변화를 초래할 것인 바, 혁명 2세대 전문기술관료들은 아직 이념지향적 성격이 강하지만 점진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 97) 김정일은 “자력갱생하는 것은 남의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남의 것이라도 선진적인것은 북한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72.

1. 분조도급제와 식량 지원·수입정책 확대

1997년에도 북한의 식량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식량사정 보고서」에서 1996년 북한의 쌀 및 옥수수 수확량을 280만톤으로 북한주민 최저 필요량에 280만톤 부족한 것으로 평가, 1997년 7월부터 9월까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⁹⁸⁾ 한국정부의 한 당국자 또한 1996년 곡물수확량을 350만톤으로 평가, 1997년 10월말까지 200만톤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⁹⁹⁾ 미국 CIA는 1996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총310만톤 정도로 추정하며, 이는 사상최대의 수해를 당했다고 북한이 주장한 1995년 총생산량 345만톤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평가하고,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하였다.¹⁰⁰⁾ 그리고 일본을 방문한 「조·일 우호친선협회」의 북한 노동당 대표단 또한 250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밝혔다.¹⁰¹⁾ 한편 북한은 1995년 10월에서 1996년 10월 사이에 외국과 국제기구로부터 총 38만 9천톤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⁰²⁾ 따라서 향후 김정일 정권은 식

98) 「朝日新聞」, 1996.12.13.

99) 「조선일보」, 1996.12.13.

100) 「매일경제신문」, 1996.12.19.

101) 「한국일보」, 1996.12.14.

102) 「조선신보」, 1996.12.18. 그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시리아 14만톤, 중국 12만톤, 세계식량계획 5만톤, 조총련 2.12만톤, 홍콩 2만톤, 국제적십자사 1.2만톤, 스위스 8천톤, 유엔아동기금 2900톤, 인도 1천톤, 일본의 기관과 단체 189톤, 리비아 5000톤, 노르웨이·미국 선명회 3700톤이다.

량난을 체제안정화 구도속에서 해결하기 위해 식량난의 원인을 천연재해(수재와 가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선전하는 동시¹⁰³⁾에, 조심스러운 농업개혁과 더불어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북한은 분조도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¹⁰⁴⁾ 김정일 정권의 유일체제가 지속되는 한 집단농장의 개인농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생산부족과 배급경제의 한계를 농민시장의 확산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북한은 대외적으로 당면 식량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거듭 강조할 것이다.¹⁰⁵⁾ 북한은 식량난의 원인을 자연재해로 선전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인도적 지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중국에 대해서는 미·중 패권구도 가운데 있는 북한의 전략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곡물무상 원조를 확보할 것이며,¹⁰⁶⁾ 과잉생산된 쌀의 보관문제에 어려움

103) 북한의 중앙방송이 수해물자에 대한 국제적 지원사실(리비아, 세계 식량계획, 노르웨이, 미국 선명회, 유엔아동기금, 적십자, 적반월회 국제연맹, 세계교회협의회, 홍콩의 카리타스, 독일 등)을 보도하는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중앙방송」, 1996.12.17.

104) 북한은 1996년 12월 18일 농촌청년분조, 작업반 열성자회의를 개최하여 분조강화와 청년들의 사상적 결속 강화를 통해 농업생산 증대를 독려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 1996.12.19.

105) 1996년 11월 13~17일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식량회의에서 공진대 정무원 부총리는 북한의 식량난 심각상을 소개하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평양방송」, 1996.11.20.

106) 북한은 이미 1996년 5월 부총리 홍성남의 방중을 통하여 향후 5년

을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명분하에 무상원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북한은 자력갱생 지원 차원에서 쌀 및 각종 곡물류 종자개발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기술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북한은 일본에게는 새로 개발된 수확고가 높은 신품종 쌀 종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은 식량 수입정책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농업은 구조적으로 자급자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수출산업 육성을 통하여 외화를 획득함으로써 부족한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을 것이다.

2. 에너지 개발과 합작사업 추진

첫째, 북한은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간고분투·고난의 행군정신’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별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을 촉구할 것이다. 최근 김정일은 각 지방마다 중소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지방의 전력수요를 자체로 보장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⁰⁷⁾

간 연 50만톤(무상 25만톤, 유상 25만톤) 곡물지원을 약속받았다. 「조선일보」, 1996.7.19.

107) 「内外通信」, 제10384호. 강계시·성간군·장강군·허천군·덕성군·대흥단

둘째, 북한은 에너지난을 자력갱생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해 원유탐사 사업에 더욱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57년 함경도 아오지지역에서 소련과 루마니아와 함께 유전을 탐사하였고, 1978년 서해와 중국 발해만에서 유전을 탐사한 적이 있다. 그리고 1988년에는 서해 남포 앞바다를 이란 및 호주와 공동탐사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신포 대륙붕 지역을 일본기업에게 공동탐사 제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은 일본 기업과 합동으로 황해도 앞바다에서 유전조사사업을 벌인 결과, 16개 해역에서 최대 100억 배럴 규모의 유전을 발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¹⁰⁸⁾

셋째, 북한은 석유정제 설비에 대한 서방 기업과의 합작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입지적 조건은 선진 석유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아시아 지역으로의 석유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석유기업들에게 전진기지로서 석유정제 설비를 건설하게 한다면, 이를 통해 원유를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미약한 석유산업 발전에 초석으로 삼을 수 있다.

넷째, 북한은 자국의 노동력과 러시아 또는 중국의 원자재와 남한의 자본을 결합하는 다자적 합작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군 등에 건설된 중소형발전소를 확산시켜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108) 「서울신문」, 1996.9.19; 김정우의 오사카 조총련 상공인들과의 대담 시 발언, 「경향신문」, 1996.8.31.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동시베리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 남북한을 통과하여 일본과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로 수출하기 위한 합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난과 외화난을 함께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3. 간부교육과 대남한기업 경협 증진

(단기 정부 배제, 중·장기 정부 협상)

첫째, 북한은 생필품난을 타개하고, 주민생활을 신속히 향상시키는 방편으로서 내부적으로는 경제기관 간부들의 전문지식과 현대과학기술 습득을 강조할 것이다.¹⁰⁹⁾

둘째, 북한은 남한기업과의 합작투자 사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북한은 남한의 상품을 반입하여 생필품난을 타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남한 상품 반입이 북한 체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할 것이다. 이에 북한으로서는 합작투자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고, 이를 가공하여 남한 및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동시에 내수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진행함으로써 남한상품의 북한내 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은 이같은 남북경협의 증진을 통해 보다 활발히 의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경협의 활

109) 「민주조선」(1996.12) 사실; 「内外通信」, 제10386호.

성화는 북한의 투자환경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 외국 투자가의 대북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경협을 증진을 통해 외자유치 설명회를 갖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넷째, 그러나 북한은 남한경협에 있어 당분간은 이중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대내 정치적인 안정과 대남 분열을 목적으로 정부간의 경협은 거부하면서도,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의 교류·협력은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4. 무역제일주의 강화와 무기밀매 지속

첫째,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다자간이든 쌍무적이든 국제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외자유치를 성사시킨 대외경제부문 일꾼 들에 대한 승진 특혜 등 실적포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¹¹⁰⁾

둘째, 북한은 향후 무역제일주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¹¹¹⁾ 1996년 봄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은 자립

110) 북한에서는 현재 5백만 달러 이상의 외자유치를 성사시킨 간부들에게 '노력영웅' 칭호와 함께 두 직급 승진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선일보」, 1996.10.16.

111) 북한은 이미 1989년 대외경제위원장 김달현의 논문을 통해 대외무역의 중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달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

경제가 국제적인 경제협력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님을 재차 역설한 후, 자본주의 시장으로의 무역확대 방침을 강조하였다.¹¹²⁾ 그는 세계시장이 사실상 자본주의로 단일화되었음을 인정하고, 남남협력의 바람직한 모델로 동남아시아시장으로의 진출을 첫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교역형태에 있어 국가간 구상무역 방식을 탈피해 무역제일주의라는 원칙하에 다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수출품을 늘이려는 노력과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나진·선봉지역 개발에도 대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밝혔다 (<부표 5>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현황 참조). 또한 최근 대외경제위원장 이성대는 ‘당의 무역제일주의 방침 관철을 당면한 중대임무’로 제시하면서, 관련부문 종사자들이 신용을 철저히 지키고 대외시장 개척하는 데 주력할 것을 촉구하였다.¹¹³⁾

셋째, 북한은 나진·선봉지대의 실험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신의주·남포¹¹⁴⁾·휴전선 인접지

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 (1989년 2호).

112) 김정우, 「한겨레 21」, 1996.5.9.

113) 「로동신문」, 1996.12.

114) 북한은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하기 위해 실무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나진·선봉 지역 이외에 신의주와 남포를 경제특구로 추가 개방할 계획과 관광개발을 위해 핀란드의 관광연구 그룹을 초청, 공동연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일보」, 1996.10.20.

역(예 개성), 금강산지역¹¹⁵⁾ 등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이미 1992년 2월 대우그룹과 남포공업단지 개발에 합의한 적이 있고, 제1교역대상국인 중국은 물론 남한과의 경제교류 활성화 및 임가공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신의주와 개성 등 물자교류 증개지 역할을 감담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강산 일대를 남한의 설악산과 연계하여 공동개발할 경우 세계적 관광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은 제2경제위원회를 통한 군사무기 밀매는 외화획득 차원에서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인민경제의 전반적 부진으로 인해 무역이 위축됨에 따라 군 경제가 북한 경제 및 무역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의 군사무기 판매 문제는 중국 군부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115) 북한은 1998년 중반 쯤 한국 및 일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원산~금강산 일대를 개방하려는 계획하에 세부사항을 김경희 당 경제정책검열부장 주도하에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998년 중반으로 시기를 설정한 이유는 금강산지역의 숙박·위락시설 준비와 1998년 2월 출범하는 남한의 차기정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지며, 외금강만 개방하는 이유는 해금강과 내금강에는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일보」, 1996.10.16.

제 V 장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1. 남북경협 실태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북경협은 남북한 간 물품의 반출·반입 곧 교역을 의미하는 경제교류와 각종 투자 행위를 의미하는 경제협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¹¹⁶⁾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고, 또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남북경협을 남북한 간 상품 및 생산요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상정한다.

한편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의 하위부분을 이루는 동시에, 남북한 각각의 대외경제관계 하위부분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남북경협은 남북한의 통일정책 및 대외경제정책의 종속변인이 된다. 그 결과 현 단계에서 남북경협의 전면적 활성화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남한은 남북경협을 ‘통일지향적’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나, 북한은 ‘체제유지적’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근본적인 변화와 진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방식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116)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부속 합의서」 참조.

있다.¹¹⁷⁾ 첫째, 간접 또는 직접 교역 방식이다. 남북 교역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양자간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있어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북한이 적절한 구매력과 경화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양자간 거래가 세계 보편적 시장의 통상적 거래 관행에 유사하여야 한다.

둘째, 임(위탁)가공 무역 방식이다. 이는 수직적 분업형태의 산업협력으로서 한국에서 제공하는 원·부자재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를 가공한 후 다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경제협력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남한의 임금상승 요인과 북한의 체제 불안 요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1994년부터 직·간접 교역 보다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다자간 협력 방식이다. 이것은 남북한 쌍무적 차원의 경협이 현 북한 체제의 내부 정치사정 또는 경제적 여건 미비로 인해 쉽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한 및 제3국이 함께 하는 경제협력을 의미한다. 중국의 동북 3성과 내몽고·러시아의 극동 지역·일본과 남북한을 연결하는 동북아 경제권 개발 또는 두만강 유역개발 계획에의 참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넷째, 제3국에서의 남북한 공동개발 방식이다. 이는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킨 형태의 협력방안으로

117) 정순원·최광석, “남북한 경제통합론의 평가,” 「구조 전환기의 남북한 경제협력」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pp. 96~98.

서 러시아의 시베리아 자원 공동개발, 중국의 삼강평원 농업개발 등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에게 외화획득과 해외진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대외개방을 위한 점진적 조치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남북한간의 공동개발 방식이다. 이것은 남북한간 광자원의 공동 개발을 비롯해서 광산 자원, 수자원, 임산 자원에 대한 공동개발을 통해 경험을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1990년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금강산 공동개발 계획 구상이 논의된 적이 있고, 북한도 「원산-금강산 휴양지 국토종합건설」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는 바, 이는 향후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위의 5가지 방식 가운데 현재 북한의 경제난 해결 및 체제안정화 욕구를 충족시키며 민족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은 임가공 무역방식과 다자간 협력방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신뢰구축이 조성되면 직접 교역과 남북한 공동개발 방식이 주요 경험방식이 될 것이다.

가. 현 황

남북경협을 실질적 계기는 1988년 남북물자교역을 허용하는 남한의 「7·7 특별선언」과 후속조치¹¹⁸⁾에 의해 마련되었다.¹¹⁹⁾

118) 「남북물자교류 지침」(1988.10.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88년 이후에 진행된 남북경협은 시험기(1989~90), 확대기(1991~92), 정체기(1993~94) 그리고 조정기(1994.11~현재) 등 4시기로 특징화할 수 있다.¹²⁰⁾ 4시기에 걸친 남북경협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¹⁾

(1) 물자교역

첫째, 남북교역 총액은 남북대화의 활성화에 따라 1991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주었다(<표 5-1> 참조). 그 결과 북한 경제에서 남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커졌다. 물론 1993년 봄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교역 또한 다소 위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북간 교역은 경제논리에 의해 뒷받침된 내적 추동력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북·미 기본 합의문」 채택과 남한의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1994.11.8)천명으로 인해 다시 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남북

(1990.8.1) 및 「시행령」(1990.8.9) 「시행규칙」(1990.11.9), 「남북협력 기금법」(1990.8.1) 및 「시행령」(1990.12.31) 「시행규칙」(1991.3.27).

119) 남북한 경제관계에 있어 의미있는 최초의 변화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채택으로 볼 수 있으며, 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 까지 5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경제회담」을 통해 경제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수영 외,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57~64.

120) 조동호, 「남북경협의 전망」 「국제문제」(1996.4), pp. 43~46.

121) 최수영 외,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57~78; 김영윤, 「남북경제협력의 특징과 정책적 과제」(한국정치학회 발표논문, 1995.11.11), pp. 4~13.

교역 총액이 남한의 무역(1994년 총액: 1,983.6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으나, 북한 무역(1994년 총액: 21.1억 달러)에서는 9.2%에 달하였다. 한편 1995년 남북교역 총액이 3억 달러를 넘어섰는 바, 최근 무역 총액이 줄어들고 있는 북한 당국으로서는 남북 교역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표 5-1> 연도별 통관현황(1989~1996.7)

(단위: 천 달러)

연도	반입	반출	합계
1989	18,655	69	18,724
1990	12,278	1,187	13,465
1991	105,722	5,547	111,269
1992	162,863	10,563	173,426
1993	178,166	8,425	186,591
1994	176,298	18,248	194,546
1995	222,855	64,435	287,290
1996.1~7	98,608 (132,273)	45,235 (37,407)	143,843 (175,680)

주: 1. ()는 1995년 동기실적임.

2. 1995년 대북 쌀지원(150,100톤, 237,213천 달러)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동향」, 제62호 (1996.8.1~8.31), p. 28.

둘째, 남북교역은 그 방식에 있어서 반입 중심·간접교역 위주·대기업 주도·위탁가공 활성화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남북교역에서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양이 거의 90%에 달하는 바,¹²²⁾ 반입 절대초과의 불균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남북교역은 초기에 남북한 당사자의 직접적 접촉없이 홍콩, 중국 등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하여 북측 당사자와 직접 협상하되 계약 및 대금결제는 중개인을 통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간접교역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¹²³⁾ 남북교역 참가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1994년 경우 총 16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중 삼성물산·엘지상사·대우 3개회사가 전체 반출·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전체 교역액의 약 70% 이상을 대기업이 주도하였다. 그리고 1991년에 처음으로 성사된 위탁가공은 1993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전체 교역에서 15%를 넘게 되었다¹²⁴⁾(〈표 5-2〉 참조).

122) 1995년까지의 통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한의 반입은 8억7천6백만 달러로서 전체 교역총액 9억8천5백만 달러의 약 89%를 차지한다.

123) 남북교역에서 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 안팎을 맴돌고 있다.

124) 통일원, 「남북교역 추진현황 1988~1996」 (서울: 통일원, 1996).

<표 5-2> 위탁가공교역 승인현황(1991~1996.8)

(단위: 천 달러, %)

	반 입		반 출		합 계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1991	23	0.001	13	0.05	36	0.02
1992	556	0.3	413	3.2	969	0.5
1993	4,385	2.3	3,611	35.2	7,996	4.0
1994	16,598	8.2	11,966	47.1	28,564	12.5
1995	26,490	11.2	20,747	28.1	47,237	15.2
1996.1~8	16,348 (20,198)	13.9 (11.4)	23,642 (14,662)	49.7 (27.5)	39,990 (32,537)	24.2 (14.1)

주: ()는 1995년 동기실적임.

자 료: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제62호 (1996.8.1~8.31), p. 23.

(2) 협력사업

남북교역의 점진적 증가 추세와 달리 투자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1년 1월 현대 정주영회장의 방북 이후 대북투자과 관련하여 많은 방북과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로 남북경협 사업의 추진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핵협상이 타결된 이후 남한 정부가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남한 기업인 및 기술

자의 방북이 1994년 말 이후 재개되어 방북 기업인이 증가하였다¹²⁵⁾(<표 5-3> 참조). 그러나 현재 대우의 남포공장 일부 가동¹²⁶⁾을 제외하고는 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¹²⁷⁾

125) 통일원에 따르면, 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2년 동안(1994.11~1996.10) 방북한 기업인은 34개 기업 208명(52건)으로 집계되었다. 기업들의 대북투자 협의분야는 섬유·의류(9개), 건설(8개), 광물(6개), 식음료(5개), 신발(4개), 농수산물(4개), 해운(3개) 등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대기업은 주로 투자관련 사업 및 위탁가공 분야를, 중·소기업은 섬유·의류 위탁가공과 물자교역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점차 중소기업의 비중(1996년 15개 방북기업 중 10개가 중소기업임)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통일원, “기업인 방북 현황 및 평가,” 「국민일보」, 1996.12.24.

126) 대우는 남포공단 내에 4개품목(셔츠, 메리야스, 재킷, 가장) 3개공장의 설립·가동을 위하여 기술자를 파견하였다(1995.6~9: 13명, 1995.10: 5명).

127) 조동호, “남북경협의 전망,” 「국제문제」(1996.4), pp. 47~48.

<표 5-3>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현황

기업명	승인일	사업내용	투자규모	복측회사	투자지역
(주)대우	1992.10.5	서츠·브라우스,가방 등 9개 사업		삼천리총회사	남포공단
	1995.5.17 협력사업 승인	서츠·브라우스(283만 달러) 가방(114만 달러) 자켓(115만 달러)	512만 달러	삼천리총회사	남포공단
고합물산 (주)	1995.5.17	의류·봉제(70만 달러) 직물(450만 달러) 이불·솜(66만 달러) 수지병(100만 달러)	686만 달러	광명성총회사	협의증
(주) 한일합섬	1995.6.26	쉐타(250만 달러) 봉제(110만 달러) 모포(220만 달러) 방직(400만 달러)	980만 달러	조선은하무역 총회사	남포
(주) 국제상사	1995.6.26	신발제조	350만 달러	조선은하무역 총회사	남포
(주) 녹십자	1995.9.15	의약품제조(유로키 나제)	300만 달러	광명성총회사	평양시 대동강 또는 용성구역
(주)동양 시멘트	1995.9.15	시멘트저장 싸이로 1기 건설	300만 달러	대의경제협력 취진위원회	나진항
동룡해운 (주)	1995.9.15	하역설비(지게차2 대, 크레인 1대)	500만 달러	해양무역회사	나진항
삼성전자 (주)	1996.4.27	통신센터건설·운영	700만 달러	조선체신회사	나진·선봉 지역
(주)태창	1996.4.27	금강산 샘플 개발·판매	580만 달러	릉라도 총무역회사	금강산지역
대우전자 (주)	1996.4.27	TV 등 전자·전기 제품 생산·판매	640만 달러	삼천리총회사	남포공단

자 료: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제58호, pp. 35~36.

(3) 대북지원

물자교역과 협력사업(대북투자)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진행 되는 데 비해, 대북지원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대북지원은 자원의 일방적인 이전이기 때문에 남북경협 유형 중 가장 강력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남한 정부는 북한의 에너지난과 관련하여 미국·일본 등과함께 경수로 건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미 기본합의문」 체결, 「북·미 공동언론발표문」 발표(1995.6.12), 「경수로 공급협정」 서명(1995.12.15)으로 인해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점차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지원주체가 되고, KEDO는 한국전력을 경수로사업의 주계약자로 선정(1996.3.19)하였다.¹²⁸⁾ 또한 KEDO는 북한과 「경수로 공급 후속의정서」 협상을 진행하여, 3개 의정서에 서명(7.11)하였다.¹²⁹⁾ 북한 또한 경수로 건설 지역인 신포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평양-신포간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경수로사업에 임하였다. 그러나 경수로사업은 북한의 잠수함침투사건(9.18)으로 말미암아 최근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

128) 1996년 7월 15일 한전은 경수로사업의 개략사업비로 건설비용 49억 2천만 달러, 부대비용 4억 달러 등 총건설비 60억 달러 이상을 산정, KEDO에 제출하였다. 「조선일보」, 1996.7.16.

129) 「KEDO의 법적 지위와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 「KEDO와 북한간의 통신의정서」; 「KEDO와 북한간의 통행의정서」; 「경향신문」, 1996.7.11.

둘째, 남한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하여 1995년 6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16척의 국적선과 2척의 제3국선박을 통해 150,100톤의 쌀을 북한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였다. 그러나 쌀 하역과정에서 인공기 계양사건과 쌀 수송선 억류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북경 쌀회담과 추가 식량지원이 중단되었다.¹³⁰⁾ 이에 남한 정부는 북한 당국의 공식 요청, 한반도내에서의 회담개최, 대남비방 중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 쌀지원 3원칙'을 제시하였다.

셋째, 남한 정부는 또한 북한의 생필품난 및 의화난 등과 관련하여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해 나올 경우 다양한 경험 방안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¹³¹⁾ 예컨대 ① 나진·선봉지역에의 투자, ② 남북교역의 확대를 통한 북한에 필요한 물품공급, ③ 한국 관광객의 북한 방문 허용 용의 등을 예시하여 북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예시하였다.

130) 물론 인도주의적 지원차원에서 대한적십자사 창구를 통해 1995년 11월부터 1996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담요, 라면, 식용유 등 약 7억원 상당의 수해구호물품이 북한에 제공되었다. 그리고 1996년 6월에는 남한 정부도 유엔 인도주의사무국(DHA)에 대북 식량지원액으로 3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민간차원에서의 곡물(쌀 제외)지원도 허용하였다. 「한국일보」, 1996.6.12.

131) “1996년 ‘8·15 경축사,’ 「남북대화」, 제64호 참조.

나. 문제점

남북경협은 물자교역을 중심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발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의 적극적 노력이 없이는 또한 획기적 발전이 어려운 상태라 할 수 있다.

(1) 일반적 문제점

첫째, 남북경협은 남북간의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일전선전술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남한은 남북경협을 대북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나진·선봉 국제투자 포럼」(1996.9.13~15)에 북한의 선별초청과 남한의 거부로 인해 남북경협 사업이 주춤거리게 된 것도 그 하나의 실례이다.

둘째, 남북경협의 발전은 북한의 내부사정에 의해서도 제약되고 있다. 북한의 외화부족에 따른 수입역량의 부족,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의 제한, 간접교역 및 수송체계 미흡에 따른 물자교역에서의 비효율성 그리고 남한상품의 북한 반입 및 남북한 직접교류에 따른 정치·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인해 남북교역은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들에게 나진·선봉으로의 일방적 진출과 과도한 임금 등을 종용함으로써 실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셋째, 남북경협에 대한 남한의 국민적 합의 불일치와 정책적 일관성 부족도 남북경협 활성화에 하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경협 적극론자들은 우리가 대북경협을 늦출 수록 미국·일본·중국 자본에게 북한 진출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반대로 보수성향의 학자들은 북한이 체제변화를 두려워해 시장 경제로의 개혁을 주저하고 있으므로, 북한 경제가 자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독일식의 흡수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햇볕론’과 ‘바람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장들이다.¹³²⁾

넷째,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과 이종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남한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북한 당국은 체제불안정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아직은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섯째, 남북경협 활성화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의지에 의해

132) 이에 대한 타결책으로는 남북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서 소형 쌍무적 협력과 대형 다자적 협력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대형 쌍무적 경제협력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민병용·김성훈, “남북한 현안문제, 어떤 것부터 풀어야 하는가?” 『신한국 창조와 조국통일의 과제』 (서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3), pp. 111~140.

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사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으로서는 체제유지가 우선적 목표이기 때문에, 체제 변혁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남한 주도의 각종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취하기 쉽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안과 경제적 사안의 분리' 및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 증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안별 문제점

(가) 농업부문¹³³⁾

첫째, 남북한의 농산물 교역에 있어 간접교역 중심의 교역형태와 구상무역 중심의 교역 결제방식은 남북경협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해외 중개상 또는 해외 현지법인, 해외지사를 통한 간접교역은 남북한의 이익보다 홍콩·중국 등 제3국

133) 김운근, "남북한 및 중국의 농산물 교역 현황과 전망," 「동북아(남북한·중국) 역내 농산물 교역과 농업개발협력」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유승경, "북한의 농업구조와 남북한 농업협력의 방향," 북한경제포럼, 「북한경제논총」, 제2호 (1996), pp. 113~126.

의 중계상에게 보다 큰 이익을 전가시킬 수 있다. 또한 경화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계약물량의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¹³⁴⁾

둘째, 북한 농업제도의 구조적 한계는 남북한 농업협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집단소유와 분배체계의 구조적 모순 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농을 허용하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집단농장 해체를 유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같은 조건하에서 북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남한이 협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셋째, 농업협력에 대한 정치적 결단 및 농업분야의 여타 산업분야와의 연관성 문제는 남북한 농업협력 활성화에 있어 또 다른 제약요인이 된다.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가장 절실한 문제는 2년간 수해로 매몰된 농지를 복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결단과 연결된 문제이다. 또한 비료·농약·농기계 생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에너지 지원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 또한 남한의 자원 조달과 연결된 문제이다. 즉 농업 부문의 협력 문제는 다른 산업 부문의 협력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자원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134) 1991~92년 반출된 쌀과 마늘의 대용품이 북한으로부터 일부만 반입됨으로써, 계약 잔여물량에 대한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나) 에너지부문

첫째, 4대난 중에서 현재 가장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북한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은 에너지난이다. 그런데 에너지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석탄산업의 현대화와 원유의 공급확대 그리고 원자력의 도입 등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능력으로는 곤란한 실정이며, 서방의 자본과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서방세계는 남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경협이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보다 적극적·전면적인 대외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북한 체제의 불안정화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주저하는 태도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경협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둘째, 남한의 정·경 불가분리정책 또는 핵문제와 경제협력 연계정책은 남북경협의 정상적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 생필품 및 무역부문

남북 물자교류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남북한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에서 오는 북한의 구매력 부족,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의 제한, 간접교역 및 수송체계의 미흡으로 인한 물자교역에서의 비효율성, 그리고 북한이 정치·사회적 이유로 인해 남한 상품의 북한 반입 및 남북한의 직접적인 경제교류를 꺼려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¹³⁵⁾

2. 남북경협 방향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남한 배제 전략 또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게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 가야 할 책임과 그 기반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남한이 선택해야 할 남북경협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5) 오승렬·최수영·박순성,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64~72.

가. 목 표: 민족경제 발전과 민족복리 향상

남북경협의 기본목표는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¹³⁶⁾ 따라서 남북간의 경협은 개별 국가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우선적 목표로 상정하는 일반적인 국가간 경제협력과 구별된다. 다시말해 남북경협은 남과 북 각자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족경제 발전과 민족전체 복리증진을 함께 추구한다. 이와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남북경협의 기본목표는 다시 실천적 구상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목표로 제시될 수 있다.¹³⁷⁾

첫째, 남북한 지역경제의 보완적 발전을 도모한다. 이는 남과 북의 개별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구조가 생산요소의 부존과 경제발전 단계상에서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예컨대 남한의 자본·기술이 북한의 노동력·자원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지역경제의 보완적 발전이 가능하다. 또한 남한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해외로의 설비이전이 요청되는 반면, 북한은 경공업 분야의 낙후로 인해 이 산업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136)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

137) 남북경협의 세부목표는 다음을 참조. 박순성,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경제분야 실천방안,”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8), pp. 79~86.

둘째, 남북한 지역경제의 경제력 격차 해소를 추구한다. 이것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된 발전에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경제력 격차 해소를 위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식량·에너지·생필품·외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취약한 농업부문과 사회간접자본 등의 생산기반 시설분야에 대한 협력이 시급하다. 경제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류사업 및 협력사업이 지원사업과 적절히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한 경제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여야 한다. 남한의 시장경제체제와 북한의 계획경제체제 선택에 따른 상이한 경제체제 운영원리가 점진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통합은 시장경제체제를 중심으로 하되, 계획경제체제의 장점을 흡수하는 혼합경제 또는 공동체경제 지향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이 세계경제에 동참하여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할 경우 민족경제의 발전도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가 최선의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추구해 온 계획경제의 장점을 수용하여 통일한국에서 공동체지향적 혼합경제체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수도 있다.

넷째, 남북한 지역경제는 발전적이고 개방적인 경제를 지향

해야 한다. 남북한 지역경제는 경협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펼쳐 나감으로써, 공동으로 국제경제에서의 지위 향상과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위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남북경제공동체란 단순히 한반도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단일화된 민족경제로 인정받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볼 때, 남북경협의 세부목표는 남북경제공동체가 형성을 지향하면서 하나의 민족경제로서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한 남북한 산업구조 조정계획의 사전수립, 한반도 경제발전공동계획을 추구하여 21세기 동북아경제 및 세계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기본 방향: '북한의 자주적 체제발전에 대한 협력'

첫째, 남북 경협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북한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북한의 현실과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다. 또한 북한은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남한배제와 대미·일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쉽지 않

다는 점을 북한 당국도 알고 있을 것이다.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체제안정성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도 북한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최소수준에서 진전시키기 위해 정·경 분리의 대남정책 또는 남한 정부·민간기업 분리의 강경·유화 병행정책을 추구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남한의 대북 경협정책 또한 북한의 경제상황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북한의 식량난·에너지난·생필품난·외화난과 같은 문제들이 남북경협 추진과정에서 특별한 고려사항으로 반영된 적은 많지 않았다. 동시에 북한의 정·경분리 정책을 통일전선전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당국간 대화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북한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렛대로 생각하는 경향 또한 강하였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는 아직도 적대적 공존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가 진정한 화해·협력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 대한 불신(적화통일과 흡수통일)을 해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당국간 대화 및 경협이 흡수통일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이다. 그리고 남북경협의 발전이 북한경제 회복에 가장 요긴하고 이익

이 됨을 북한이 스스로 깨닫도록 협력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설령 북한이 이를 더디 깨닫거나 심지어 깨닫지 못할 지라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 경협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방적 지원 또는 시혜의 태도가 아니라 상호존중의 협력적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협력이 남한의 일방적 지원형식으로 진행된다면 지속적 협력추진은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협력을 통한 경제성 확보가 기본목표와 협력방향 가운데 하나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일방이익(일방손실)은 시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반입위주의 물자교역은 북한에게 외화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나, 남한은 반대 입장에 처하게 되어 일방손실을 입게 된다. 이같은 과도한 교역수지 불균형이 장기 지속될 경우 물자교역의 안정적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방적·무조건적 대북지원도 규모에 있어서는 남한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나, 남·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동시에 줄 수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이 반입 위주의 물자교역 시정과 더불어 향후 대북지원에서의 조건부 지원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경협정책을 전개하는 데 있어 정부와 공기업 그

리고 민간기업의 역할분담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 전개과정에 있어 정부와 민간기업은 각자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기업은 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경협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남북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을 지속·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활용과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확대해 주는 한편, 정부의 노련한 배후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사업과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잘 대처해야 한다. 예컨대 남북경협 절차의 간소화, 남북경협 원칙의 지속적 천명, 남북경협 기금의 마련과 운용, 남북경협의 장기전략 마련, 민간기업에 대한 자문과 지원, 대북진출 민간기업의 조정 및 보호 등이 정부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또한 북한내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 및 대규모 대북지원사업과 같이 민간기업이 단독 또는 동반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민간기업들도 남북경협에 관한 자율적인 의사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올바르게 운영한다면 정부의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 경협정책을 남북 통일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하거나 반대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추진하는 것이다. 북

한은 남북경협의 확대를 남한의 흡수통일 정책 연장선상에 있는 전략으로 오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4대난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경협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남북경협을 발전시켜 가는데 있어 남한 당국과 남한 기업을 분리시켜 반응함으로써 통일전선전술적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일부 의지도 표출시키고 있다. 남한 정부로서는 북한 당국의 이같은 의구심과 전략적 발상을 해소·무력화하기 위해서라도 경협과 통일을 또는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를 병행·검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기에 따라 중점 사업을 차별화하여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¹³⁸⁾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4대난 해결을 위한 지원·협력정책을 통하여 다소 변형적인 당국간 대화와 경제인을 중심으로 하는 비당국간 대화를 병행·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체제발전과 남북한간의 신뢰 구축 및 평화상태를 조성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교역 확대·합작사업·공동개발·다자간 경제협력 등의

138) 이 글에서 단기는 체제수호적 정책을 지속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장기는 체제발전(개방)적 정책을 선택하는 기간 이후를 의미한다. 체제수호적 정책이란 북한이 기존의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와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지속한 채, 심각한 경제난의 최소부분만을 해결하려는 정책을 지칭한다. 체제발전(개방)적 정책이란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의 제한적 변화와 군사비의 대폭적인 삭감과 더불어 중국식의 부분적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경우를 의미한다.

방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하여 당국간 대화(분과위와 공동위 가동)를 정착시키도록 한다.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화를 도입함에 따라 경제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이 분권화되고 물질적 인센티브와 시장경제가 도입될 때, 이같은 북한의 경제개혁조치에 상응하는 남북간의 산업구조조정 및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동투자, 북한의 개혁지원 등과 같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남북한간의 직접적 협력이 어려울 경우, 다자간의 협력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격차가 큰 상태에서 남북협회는 남한에 대한 자본의존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중국·일본·EC·UN 등 제3국과 국제기구와 더불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3. 농업 협력 방안¹³⁹⁾

농업부문에서 협력증진을 위한 우리의 정책 방향은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히 북한의 주권과 명분을 배려하

139) 김운근, “남북한 농업 부문 교류 및 협력 방안 연구,” 「구조 전환기의 남북한 경제협력」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소, 1995), pp. 81~94; 유승경, “북한의 농업구조와 남북한 농업협력의 방향,” pp. 123~124; 남궁영·최수영,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 배경과 대북한 식량지원 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면서 신중히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물자교류에서 부터 점차 경제협력 그리고 신뢰회복에 기초한 인적 교류까지 단계적·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가도록 한다.

가. 단 기: 식량 지원과 상호보완적 농산물교류 활성화

첫째,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식량난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북한 당국이 향후에도 계속 쌀 제공을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이에 대해 북한의 명분을 살려주며, 우리의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대북 식량지원은 1984년 9월 북한의 대남 식량지원에 대한 보은과 동포애의 차원임을 밝힘으로써 남·북한의 명분을 함께 제고하되, 1995년 쌀회담의 미흡점 보완과 남북 관계개선 도모의 차원에서 경제공동위의 가동을 적극 제의함으로써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남북한의 특성에 맞게 농산물의 공급체계를 구상함으로써 상호보완적 교역을 추진하도록 한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밭과 산간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 밭작물(특히 고냉지작물)과 과실류 생산에 있어 유리하고, 남한에 비해 노동집약적 특용작물(팥·녹두·참깨·고추 등) 생산이 밀, 보리 등 주곡 생산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한간의 농산물거래를 유도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재배와 주문 생산에 의한 거래가 효과적이라 하겠다. 이는 비농업분야의 임가공 경협방식과 유사한 교역방식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남북경협기금 활용을 통해 가격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남북 농산물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북한산 농산물 반입에 있어 남한의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을 때는 남한 가격을 적용하고, 남한 농산물의 북한 반출시에는 북한의 거래기준을 적용하며 차액은 남북경협기금 등에서 보전하는 것이다.

넷째, 거래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한다. 직거래, 간접 거래, 경화 결제, 구상 무역 (공산품 포함), 계약 재배, 주문 생산 등 거래 방식을 품목별·사안별로 신축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남북교역조건은 현재의 간접교역 방식에서 직교역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결제방식도 경화결제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구상무역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최근 중국산과 러시아산이 북한산으로 위장반입되는 사례¹⁴⁰⁾가 있으므로, 위장반입 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써 원산지 확인과 동식물 검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 경제관련 자료를 적극 공개하여 기업의 자체 판단에 의해 대북 교역가능품목 발굴 및 대북 거래선 확보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140) 1989년 남북교역 시작 이후 지금까지 총 8건 120억원 가량의 북한산 위장반입 사례가 있었다.

나. 장 기: 합작투자 및 해외 공동진출

첫째, 남북 농산물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거래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합작건설을 추진하도록 한다. 북한으로부터 반입할 수 있는 채소, 과일 등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품목들은 물론 기타 품목들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보관하는 시설 및 운송 수단이 필요하다. 북한이 유통 체계 및 하부구조를 완비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저장 시설·운송 수단 등에 대한 투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에 제안한 건강식품 및 과일주스 가공공장 등을 남한기업이 주도적으로 건설할 경우, 상호간의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경험활성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동시에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 연결 수송망을 복원·확충하고, 휴전선 인접 지역에 물류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농업용 자재산업을 위한 투자 촉진이다. 노후 시설 보수, 시설 확충 등 북한의 투자수요에 대비하여 남한의 자재 산업 부문 진출을 위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 부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보증이 필요하다. 국제 콘소시엄 구성 등에 대한 정부의 중재 활동과 제도 마련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농기계, 비료 산업은 1950~60년대에 이미 설립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크게 낙후되어 있다. 남한의 기술 지원이나 시설 대체 내지는 복구를 위한 지원도 북한의 농업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업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이미 개발한 다수확품종을 제공하거나, 또는 북한 토지에서 수확량이 높은 품종을 공동개발하도록 한다. 남북 농업기술자들이 북한의 토질을 공동조사해 토질개선의 방법을 협의하고, 토질에 따른 농작물 생산의 지역별 전문화를 돕도록 한다.

넷째, 북한 농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남북 상호의 경제성을 높이고, 신뢰를 증진하는 방법으로서 제3국으로의 농업분야 공동진출을 적극 모색한다. 러시아의 아무르, 하바로프스크, 연해주 등지나 중국의 삼강평원 등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이 공동진출하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에너지 협력 방안¹⁴¹⁾

에너지 부문에서 남북협력은 남북통합이나 교류 활성화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통합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41) 정우진, 「북한의 에너지 산업」 (서울: 공보처, 1996); 장영식, 「북한의 에너지 경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4); 최수영, 「북한의 에너지수급 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이태환, 「남북한경제협력」, 「94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Ⅲ)」 (서울: 통일원, 1994).

첫째, 남한은 날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소, 정유소 등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하나, 지자체 도입 이후 이를 위한 입지선정 문제가 핵심과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북한지역에 남북 공동으로 에너지 설비를 건설하여 함께 이용한다면 남북 모두 경제적 이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은 당면한 에너지 문제를 자체의 자본과 기술 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정치적 타협하에 남한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타개할 수 있다.

셋째, 남북한은 한반도 주변의 변화하는 에너지 정세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공동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동시베리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은 최근 정치적 변화로 인하여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원적 시장에서 일원적 시장으로 전환하였고, 자원 보유국과 자원 소비국 및 선진국과 중진국, 후진국이 혼재된 특성과 많은 인구나 풍부한 노동력, 빠른 경제 성장 속도 등 거대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상호 비교우위를 보완, 경쟁력을 확보하여 이러한 지역적 장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공동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방향에서 볼 때 에너지 부문에서 남한의 경험 정책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가. 단 기: 에너지 지원과 자원 협력체제 구축

초기에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공급부족을 해소하도록 북한을 지원하는 동시에 남북 에너지 상호교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에너지문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첫째, 남한의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공장에서 과잉생산되는 고유황의 경유와 납사 등 석유제품을 북한의 석탄과 부등가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경유와 B-C유, 젯트유, 용제와 일시적 수급조절을 위해 수출되는 여타 석유제품들을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수출하고, 그 대신 북한에 풍부한 마그네사이트·철·니켈·아연 등의 광물을 구상무역 형태로 수입하여 에너지와 광물자원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남북한의 전기부하 수요가 시간적, 계절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¹⁴²⁾에 착안하여 협정을 통해 전기의 안전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남북한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남한에서는 비수기인 봄·가을과 저녁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과잉생산된 전기를 1/3

142) 전기에 대한 북한의 피크 부하는 겨울 초저녁 6~7시경에 발생하며, 남한의 경우는 하계 7~8월의 오후 2~3시경에 발생한다. 북한은 일몰과 동시에 생기는 전등수용과 가정용 등이 피크 요인인데 반해, 남한은 주간의 생산과 경제활동 및 에어컨 등이 주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남한은 동계 초저녁 전기를 북송하고, 북한은 하계 오후에 남송하는 교환협정을 체결한다.

가격으로 소비 또는 버리는 실정인 바, 이를 북한에 송전하는 것은 적극 고려할 만하다. 북한은 심야와 공휴일은 수요가 적어서 30% 내외의 화전시설이 정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장 기: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공동 참여

북한의 에너지 산업 및 소비 구조를 효율화하는 데 일조할 뿐 아니라, 에너지 부문에서의 합작투자 및 자원의 공동개발 등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세계 에너지 시장에 남북한이 공동대응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통일한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작하여 북방자원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원개발과 공동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의 노동력은 이미 시베리아의 채반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노동의 질도 잘 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남한으로서는 통일한국의 사회간접자본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통일대비 에너지 시스템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동시베리아 야쿠트 유전의 거대한 천연가스를 개발하여 북한을 통과하여 일본까지 연결하는 5,470km의 가스 파이프 건설사업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원유탐사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공동개발을 추

진한다. 북한의 원유도 궁극적으로는 한민족의 것이므로,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되어 탐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북한이 남북협력을 정치적 논리에 의해 거부할 경우, 다자협력을 통해 에너지부문 협력을 도모해 나갈 수도 있다. 예컨대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에는 에너지관련 사업으로 전력개발 계획이 있는 바, 다자협력 구도 가운데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이 늘어나는 가스수요에 대비해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가스개발에 점차 개입할 소지가 높은 데, 일본·러시아·남한·북한이 협력하여 에너지개발을 모색할 수도 있는 것이다.

5. 경공업 협력 방안

가. 단 기: 교역 확대

첫째, 신뢰성 제고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일정규모의 생필품을 비롯하여 의약품 및 방역설비 지원을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만약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일부 보수적인 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종교계 및 자선단체들을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을 적극 후원함으로써 북한의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요망된다.

둘째, 대북 경협정책을 대북 정치군사 정책과 연계시키는 전략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미 관계개선에 따라 미국의 대북 무역 및 투자장벽 추가완화조치가 예상되고, 북일 수교교섭의 재개에 따라 일본의 대북 경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정부가 대북 경협정책을 남북한 정치관계에 따라 중단 및 재개할 경우, 북한의 대남불신만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계전략의 해제를 명시적으로 선언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묵시적 실천을 통해 해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⁴³⁾

셋째, 위탁가공교역을 남북경협의 활성화 수단으로써 더욱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위탁가공교역은 남북교역 확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가공교역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낮은 수준의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북한의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한국의 대북 직접투자가 이루어질 장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실질적인 남북경협의 진전을 위해 「기업주도, 정부지원」의 역할분담 구도를 확립하여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에게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축적된 경협성과를 토대로 남북경협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화한다.

143) 예컨대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 채택 이후 정부가 1994.11.8 발표한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조치」는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남북교역제도를 개선한다. 남한 정부는 1994년 11월 8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다양한 제도개선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 뿐만 아니라, 남북한 공동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었으나, 세부 절차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의 경우 교역절차, 반출입 승인절차·방북 및 북한인 접촉의 절차 등을 간소화·내실화하고, 외국환관리법·관세법·대외무역법 등과 같은 대외거래관계 법령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반입하기를 원하는 품목(에너지·식량·기계류 등) 가운데 반출규제 법규를 전향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 또한 정·경분리의 대남경협정책 또는 정부배제적 기업접근 정책을 포기하고, 정부간의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은 상품의 통관·검사, 분쟁처리방법, 경제활동 인원에 대한 신분보장 등을 포함하는 「통상협정」과 남북간 육로·해로·항로 등 교통로가 개설되고 남북간 인적 왕래 및 교통수단의 왕래에 대한 「통행협정」 그리고 남북간 우편, 전화 등 통신망 연결에 대한 「통신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남북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장 기: 중소기업 중심의 합작투자 확대

첫째,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지향하면서도 북한 체제에 부담이 적은 중소기업 중심의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한다. 이같은 정책은 또한 남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남한에서 임금 및 지가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의류, 신발, 완구, 섬유 등 단순소비재 분야의 임가공 및 합작사업은 남북한 경제에 공히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섬유, 의류 등의 분야로부터 정밀기계, 기계부품 등을 거쳐서 화학공업, 전기·전자산업, 기간산업 등으로 합작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시켜 나간다. 합작투자분야 및 합작공단지역의 선정에는 단기적 이익뿐만 아니라, 남북산업의 구조조정과 통일 이후 산업입지의 조정이라는 장기적 시각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경제의 상호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에 적극 참여한다. 남북경협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엔개발계획(UNDP)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등 다자간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 한다. 그리고 북한의 단독사업인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개발계획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등에도 참여하여 북한의 점진적 변화에 협력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남북한 신뢰를 회복토록 한다.

6. 무역 협력 방안

가. 단 기: 국제기구 가입 지원과 남북 경협창구 개설

첫째, 북한의 국제 경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예컨대 북한이 「아·태 경제협력 각료회의」(APEC)·「관세및 무역일반협정」(GATT)·「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경제기구에 가입 신청할 경우, 한국은 적극 후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동북아 경제권에서 낙오되지 않아야만, 향후 남북한 민족경제공동체를 원만히 형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남북교역 및 대외무역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민족중시적 자세를 견지한 채 인내심을 갖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북한은 엄연히 사회주의 체제이고, 또한 변하기가 쉽지 않은 체제이다. 따라서 남북교역 확대는 북한의 경제개혁 정도에 따라 추진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남북교역으로 인해 이득볼 수 있는 점이 있음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같은 조건이면 동포의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민족중시적 자세와 북한경제 발전에 협력하겠다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남북 경협에 임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이같은 태도들은 제도적 통일 이후 내적 통일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한 경제협력 대화창구를 중국과 미국에 상설화한다. 현재 중국 북경에서는 많은 남북한 경제인이 접촉·상담하고 있다. 남한의 민간기업과 북한의 대외경제위원회·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그리고 당·군·정의 무역기관 실무자들이 만나 서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같은 창구를 정부차원에서라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에 있는 상설 정부대화 창구는 돌발사태뿐만 아니라, 평시 남북 경제교류에 대해 책임있는 대처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선호하는 미국과 우리가 선호할 수 있는 중국에 개설하는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개설할 필요가 있다.

나. 장 기: 산업구조 조정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첫째, 남북한의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통일한국의 번영을 적극 추구한다. 산업구조조정 방향은 남한의 임금인상과 노동력 부족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 만회, 북한의 원만한 경제개혁 추진을 상호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정부대표 및 기업인들로 구성된 「산업구조조정협의회」를 결성하여 산업구조조정 대상 산업의 선정, 구조조정 방법, 사양산업의 이전방법, 실업문제, 업종전환 등에 대해 협의한다.

둘째, 「남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간 상품이동에 대한 제한조치를 전면 폐지하고, 자유무역을 보장한다. 자유무

역협정은 대상품목과 시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차등 실시하되, 남북한의 합의하에 경쟁력이 지나치게 높은 상품은 자유무역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이같은 자유무역협정은 대외적으로는 공통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과 함께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서울: 중앙일보사, 1995.
- 김용호. 「북한 경제난의 실체와 향후 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6.
- .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5.
- 남궁영·최수영.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 배경과 대북한 식량지원 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 (1995.5).
- 동아일보사 편. 「김정일 북한대백과」. 서울: 동아일보사, 1995.
- 북한연구소 편. 「최신 북한인명사전」. 서울: 북한연구소, 1994.
- 서울신문사 편. 「북한인명사전」. 서울: 서울신문사, 1994.
- 세종연구소. 「북한의 경제난 실태와 전망」. 96-01.
- 오승렬·최수영·박순성.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장영식. 「북한의 에너지 경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4.
- 정우진. 「북한의 에너지 산업」. 서울: 공보처, 1996.
- 중앙일보사 편. 「김정일」. 서울: 중앙일보사, 1994.

- 최수영. 「북한의 에너지수급 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최수영 외.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최은희·신상욱. 「내레 김일성입네다」. 서울: 행림출판, 1994.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비교」. 서울: 통계청, 1996.11.
- 통일원.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5.
- . 「주간 북한동향」. 각호.
-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 한세경제정책연구원. 「북한뉴스레터」, 창간호 (1995.3).
- 허문영. 「1993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의 결과분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 「북한지도부의 정세인식 변화와 정책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홍승은. 「자립경제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2. 논 문

- 김달현. “대의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 (1989년 2호).
- 김영운. “남북경제협력의 특징과 정책적 과제” (한국정치학회 발표논문, 1995.11.11).

- 김운근. “남북한 농업 부문 교류 및 협력 방안 연구.” 「구조 전환기의 남북한 경제협력」.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소, 1995.
- _____. “남북한 및 중국의 농산물 교역 현황과 전망.” 「동북아(남북한·중국) 역내 농산물교역과 농업개발협력」.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 김일성.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과 수력발전소건설을 다그칠데 대하여(1994.6.14).”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1994.7.6).”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1970.2.27).”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현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1992.12.14).”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김정일.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조선중앙방송」, 1995.6.19.
- _____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선」.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 _____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 전위가 되자.” 「근로자」 (1991년 9호).
- _____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11.4.
- 김형우. “냉전종식후, 다극화로 향하는 세계정세의 특징.” 「근로자」 (1995년 5호).
- 남궁영. “북한경제의 특성 및 추세.” 「통일환경론」. 서울: 오름, 1996.
- 민병용·김성훈. “남북한 현안문제, 어떤 것부터 풀어야 하는가?” 「신한국 창조와 조국통일의 과제」. 서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3.
- 박순성.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경제분야 실천방안.”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8.
- _____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신지호. “조조합영사업의 교훈.” 「월간 통일경제」.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 안인해. “북한 최고지도층의 정책성향과 정책결정.”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5권 2호 (1993).
- 원경호. “통하지 않는 교활한 경제적 지배수법.” 「로동신문」, 1995.8.28.
- 유석렬. “북한의 권력서열 변화와 정책방향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6.
- 유승경. “북한의 농업구조와 남북한 농업협력의 방향.” 「북한경제논총」, 제2호 (1996).
- 유영구.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2).” 「통일경제」, 1995.8.
- 이배석.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와 동북아세아경제협력” (심양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북한측 논문, 1995.8.16 ~18).
- 이장규. “북한 경제체제의 분권화에 관한 분석.” 「통일경제」, 1996.6.
- 이종욱. “자립적 민족경제는 공화국의 끝없는 흥성과 번영의 확고한 물질적 담보.” 「근로자」 (1978년 9호).
- 이찬우. “나진·선봉지대 투자 포럼의 결과와 전망.” 「통일경제」, 1996.10.

- 이태섭. “북한의 생필품난.”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 이태환. “남북한경제협력.” 「94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Ⅲ)」. 서울: 통일원, 1994.
- 임태덕. “나진·선봉지대의 개발 현황과 개발 계획.” (나진·선봉 투자포럼 배포자료, 1996.9.13).
- 장보인. “북조선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와 남북 정치경제의 교류·협력.” 「김정일체제의 대내외정책과 남북관계」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995.10).
- 정순원·최광석. “남북한 경제통합론의 평가.” 「구조 전환기의 남북한 경제협력」.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 정우진. “북한의 체제와 에너지난.”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 조동호. “남북경협 전망.” 「국제문제」, 1996.4.
- . “북한의 조기붕괴 가능성과 돌발사태 대비방안.” (통일연수원 발표논문, 1996.8).
- 조선로동당.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정형에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 「로동신문」, 1993.12.9.
- 중국 해관총국. “북한의 수출입 통계.” 「중앙일보」, 1996.12.11.
-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1995.9.12.
- 통일원. “북한의 대외경제기구 재정비·개편동향.” 「주간 북한동향」, 제233호 (1995.6.11~6.17).

허문영. “김정일정권의 안정성과 지속성”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발표대회 논문, 1995.12).

_____. “북·일관계 전망과 대응정책 방향,” 국제문제조사연구
소. 「정책연구」, 1995.2.

_____. “1996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 민족통일연합의회.
「월간 통일」, 1996.1.

홍성국. “김정일의 경제정책 성향과 전망.”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소, 1996.

홍순직. “북한의 에너지 산업.” 「통일경제」, 1996.9.

Lipset, Seymour M.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Inc.,
1963.

U.S. 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8).

3. 기 타

「국민일보」.

「남북대화」.

「내외통신」.

「동아일보」.

「로동신문」.

「매일경제신문」.

「민주조선」.

「세계일보」.

「일본경제신문」.

「조선신보」.

「朝鮮日報」.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朝日新聞」.

「중앙일보」.

「평양방송」.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DPRK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Report.

<부표 1> 나진·선봉지대 외자유치를 위한 우대 조치

구 분	내 용
100%단독 투자 내용	“단계적인 지분 이전에 관항 규정”이 없어 중국보다 유리
상품에 대한 협의 가격제 실시	생필품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 협의가격제 실시(가격 자율권 부여)
낮은 세율	기업 소득세: 14%(타지역: 25%, 중국의 경제특구: 15%) * 첨단 기술, 자원 개발, 인프라, 우선 투자 대상항목, 1996년 중 투자 부문: 10% 기타 소득세(배당, 이자, 특허 사용료 등): 10%(타지역: 20%)
거래세 및 기업 소득세 감면	거래세: 50% 감면, 기업 소득세: 이익 발생 후 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 인프라 투자, 우선 투자 대상 항목, 1996년 중 투자 부문: 4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관세 면제	면제 대상: 가공 수출 목적의 수입 상품 생산, 경영에 필요한 물자, 지대내 건설 물자, 중계 수송 무역 화물
이익 재투자시 세금 환급	경영 기간 5년 이상의 기업이 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소득세의 50% 환급 * 우선 투자 대상 항목, 1996년 중 투자 부문: 100% 환급
협상, 입찰, 경매 등에 의한 토지 임대 가능	임대한 토지의 이용권에 대해 판매, 증여, 상속, 저당, 재임대 등 가능, 토지 임대료: 토지 종류에 따라 50년간 임대료 5.5~32달러/㎡ 토지 사용료: 매년 0.5달러/㎡ * 우선 투자 대상 항목, 1996년 중 투자 부문: 토지 임대료 50%감면, 토지 사용료 10년간 면제 * 장려 부문: 토지 사용료 10년간 면제
무사증 입국	초대장만으로 지대에 출입국 가능 무사증 가능 루트: 원정교(훈춘-권하-원정리-나진) 친선교(하산-두만강역-나진) 자유무역항(나진항, 선봉항) 나진시 헬리포트(연길-나진) * 경우에 따라 도문-남양-나진, 훈춘-새별-나진, 북경-청진(어랑비행장)-나진의 루트도 무사증 가능
이익 송금 자유	이익 송금세 면제, 경영 기간 만료 후 재산 반출 가능, 외화 증권 거래 및 반출입 자유, 외국 은행 지점 설치 가능
노동자 최저 임금	대내: 80달러/월, 타지역: 110달러/월

자 료: 북한대의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 환경,” 1995.9;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 1996.7;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 포럼,” 발표 자료, 1996.9.

**<부표 2> 북한의 외자유치 희망 분야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7)**

I. 공업 투자 대상 목록(101개)

번호	대상명	연 생산량	투자액 (백만\$)	위치	주최 회사	대상 부문, 협조 형식
식료·음료 부문						
1	수산물가공공장	2,500톤	1.31	나진시 신흥동	조선식료무역회사	새대상, 합영 또는 단독
2	광천수공장	5,000kl	1.26	"	"	" "
3	백주공장	100,000kl	1.50	"	"	" "
4	청량음료공장	100,000kl	1.50	"	"	" "
5	남새가공공장	10,000톤	1.25	"	"	" "
6	고기가공공장	15,000톤	4.50	"	"	" "
7	빵공장	1,000톤	0.45	"	"	" "
8	산나물가공공장	8,000톤	3	나진시 안주동	오석산무역회사	" "
9	생선냉동수산물공장	7,500톤	0.56	선봉군 선봉읍	"	" "
10	나진식료공장	2,350톤	3.06	나진시 안화동	나진경제협조회사	현대화대상, 합영
11	나진물고기가공공장	3,000톤	5.18	나진시 안주동	"	" "
12	선봉식료공장	500톤	1.73	선봉군 선봉읍	"	" "
13	선봉탄산소다공장	10,000톤	2.16	"	"	" "
14	샘물공장	36,000kl	7.42	"	은하무역총회사	" "
방직·피복·피혁 부문						
15	작업복공장	650,000벌	3.73	선봉군 선봉읍	은하무역총회사	새대상, 합영
16	여자옷공장	200,000벌	2.34	"	"	" "
17	남자옷공장	100,000벌	1.65	나진시 신흥동	"	" "
18	겨울옷공장	520,000벌	7.21	"	"	" "
19	코트공장	610,000벌	3.70	"	"	" "
20	편직옷공장	2,000,000개	1.15	"	"	" "
21	나진편직옷공장	1,000,000개	2.27	나진시 청계동	나진경제협조회사	현대화대상, 합영
22	나진편직옷공장	300,000개	0.65	나진시 창명동	"	" "
23	선봉옷공장	30,000개	0.71	선봉군 선봉읍	"	" "
24	선봉직물공장	1,050,000m	0.82	"	"	" "
25	양말공장	5,000,000켤레	0.69	나진시 신흥동	은하무역총회사	새대상, 합영
26	견사·견직공자	4,000,000M	23.6	"	비단무역회사	" "
27	가죽구두공장	650,000켤레	5.10	"	은하무역총회사	새대상, 합영 또는 단독
28	천신발공장	1,000,000켤레	2	"	"	" "

번호	대상명	연 생산량	투자액 (백만원)	위치	주최 회사	대상 부문, 협조 형식
목재 가공 부문						
29	합판공장	2,000,000m ²	3	선봉군 용상구	오석산무역회사	새대상, 합영
30	나진가구공장	6,000개	0.75	나진시 동명동	나진경제협조회사	현대화대상, 합영
31	두만강목재공장	10,000m ³	3.29	선봉군두만강구	"	"
종이·인쇄부문						
32	나진제지공장	1,100톤	1.34	나진시 신안동	나진경제협조회사	현대화대상, 합영
33	포장재공장	10,000,000개	1.50	나진시 신흥동	비단무역회사	새대상, 합영 또는 단독
34	인쇄공장	70톤	2		오석산무역회사	새대상, 합영
화학·수지 부문						
35	계약공장	40톤	4	나진시 신흥동	장생무역회사	새대상, 합영
36	선봉계약공장	1,000,000개	0.78	선봉군 선봉읍	나진경제협조회사	현대화대상, 합영
37	폴리에스터섬유공장	30,000톤	16.77	선봉군 우암리	비단무역회사	새대상, 합영 또는 단독
38	수지차크공장	6,000,000개	0.90	나진시 신흥동	온하무역총회사	"
39	점착차크공장	3,000,000개	1.29	"	"	"
40	발표수지포장재공장	5,000,000개	1.90	"	"	"
41	수지보은병공장	300,000개	1.50	"	비단무역회사	"
42	수지병공장	24,000,000개	1.60	"	온하무역총회사	"
43	수지건계공장	600,000m ²	0.50	선봉군용상구	오석산무역회사	새대상, 합영 또는 단독
44	나진화학일용품공장	1,400톤	0.61	나진시 동명동	라진경제협조회사	현대화대상, 합영
45	나진수지일용품공장	146,500개	0.53	"	"	"
46	선봉화학일용품공장	1,200톤	1.34	선봉군 선봉읍	"	"
47	선봉수지일용품공장	1,310,000개	1.18	"	"	"
48	염색공장	12,000,000M	3.50	선봉군 우암리	비단무역회사	새대상, 합영
49	고순도시약공장	100톤	5	선봉군 우암리	백송무역회사	"
50	석유화학공장	1,100,000톤	1,500	"	대의경제협력추진위원회	새대상, 합영 또는 단독
51	원유기공공장	10,000,000톤	1,400	나진시 관곡동	"	현대화대상, 합영
비금속 광물 부문						
52	유리공장	10,000,000m ²	70	선봉군 용상구	오석산무역회사	새대상, 합영 또는 단독
53	돌기공공장	100,000m ²	2	"	"	"
54	보은계공장	3,000톤	1	"	"	"
55	타일공장	200,000m ²	1	"	"	"
56	위생자기공장	200,000개	2	"	"	"
금속 부문						
57	고순도금속공장	10톤	4	선봉군 우암리	백송무역회사	새대상, 합영
58	티탄·니켈공장 기억합금공장	30톤	4.71	나진시 신흥동	조선기술수출입회사	"
59	나진철제일용품공장	400,000개	1.43	나진시 남산동	나진경제협조회사	현대화대상, 합영
기계·설비 부문						
60	전동기공장	50,000개	1.9	나진시 후창리	조선기계무역총회사	새대상, 합영
61	극소형전동기공장	50,000개	1.9	"	"	"
62	제빙기공장	50,000개	2.2	나진시 신흥동	"	"
63	자동차부속공장	200톤	0.9	선봉군 사회리	조선기계무역총회사	"

번호	대상명	연 생산량	투자액 (백만\$)	위치	주최회사	대상 부문, 협조 형식
기계·설비 부문						
64	자동차조립공장	10,000대	12	선봉군 사하리	"	세대상, 합영 또는
65	오토바이공장	10,000대	1.1	"	"	단독
66	오존소독설비공장	10,000개	3	나진시 창평동	오석산무역회사	"
전기·전자 부문						
67	인쇄기판공장	100,000㎡	4.47	나진시 신흥동	삼광무역회사	세대상, 합영 또는
68	반도체공장	8,000,000개	7.46	"	"	단독
69	화합물반도체공장	02톤	4.66	나진시 신흥동	백송무역회사	"
70	색텔레비전공장	200,000대	40	"	삼광무역회사	"
71	녹화기공장	100,000대	15	"	"	"
72	녹음기공장	300,000대	5	"	"	"
73	컴팩트등공장	10,000,000대	5.2	"	"	"
74	전자시계조립공장	1,000,000개	2.71	"	"	"
75	전기일용품공장	1,300,000개	2	"	"	"
76	냉동기공장	500,000대	17.30	"	"	"
77	고성기공장	4500,000대	4.88	"	"	"
78	전자자기공장	2,000,000개	11	"	"	"
79	필리츠자석공장	2,000톤	23	"	"	"
80	회트류자석공장	6톤	45	"	"	"
81	유소단결정공장	40톤	24.5	"	"	"
82	집적회로공장	2,000,000개	204.6	"	"	"
83	태양전지공장	10,000,000개	5.68	"	백송무역회사	"
84	건전지공장	50,000,000개	10	나진시 신흥동	삼광무역회사	"
85	액정표시판공장	13,000㎡	14.9	"	백송무역회사	세대상, 합영 또는
86	극소형컴퓨터공장	50,000대	15	"	삼광무역회사	단독
87	기계진단기공장	250대	5	나진시 신흥동	백송무역회사	"
88	금속피막저항공장	30,000,000개	10	"	삼광무역회사	"
89	일미늄전해축전기공장	30,000,000개	4.93	"	"	"
90	사기축전기공장	100,000,000개	12.33	"	"	"
91	수지축전기공장	100,000,000개	15.86	"	"	"
92	PCM층열기공장	10,000개	3.5	"	"	"
93	호출신호기공장	110,000개	3.5	"	"	"
선박 부문						
94	6월12일 배수리공장	40척	4.81	나진시 창평동	나진경제협조회사	현대화대상, 합영
95	나진선박건조공장	21척	0.95	나진시 안주동	"	"
기타 부문						
96	수예품공장	6,150,000개	0.64	나진시 신흥동	온하무역총회사	세대상, 합영
97	표재연구공장	50,000개	0.5	"	"	"
98	가방공장	1,450,000개	1.40	"	정공업품수출입회사	"
99	완구공장	3,000,000개	1.28	"	"	"
100	학용품공장	13,000,000개	1.50	"	"	"
101	마지크공장	7,000,000개	2/50	"	오석산무역회사	"

II. 하부구조(15개)

번호	대상명	내용	투자액 (백만원)	위치	주식회사	협조 형식
항 부문						
1	나진항 1부두 2호여객 안벽	현존 안벽 124m 수리 장비·일부 준설	2	나진시 창평동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오십구건설회사	합영 합작
2	나진항 2부두 5호·7호 안벽	20~40 톤급 기중기 기타 설비 및 장비	24	"	"	"
3	나진항 3부두	3.5km 조차선 1.5km 벨트콘베이어	23	"	"	"
4	나진항 4부두 신설	안벽 1,000m 수심 13m 호안 160m	180	"	"	"
5	나진항 5부두 신설	주요 운영 설비 안벽 1,355m 수심 10~12m	170	"	"	"
6	나진항 여객 부두 신설	주요 운영 설비 안벽 2,000m	80	"	"	"
7	청진동항 현대화, 신설	여객집 취급 시설, 설비 현존 3개 부두 현대화	140	청진시 신암구역	"	"
8	청진서항 3· 4호 연결 부두	600 m부두 신설 해상 집합 기중기 4대	35	청진시 송평구역	"	"
9	나진 선박 수리 도크	집합 운반 및 적재기 8대 5만 톤급 도크 1개 부두 1,200m 호안 280m	60	나진시 창평동	"	"
철도 부문						
10	나진-조선 광개 철도	49.5km 신설	46.23	나진시 선봉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오십구건설회사	합작
11	나진-훈음 철도 재건	122km	15.86	나진시 선봉군 은터군 새별군	"	"
12	두만강 복선 철다리	590m 신설	6	두만강구 새별군	"	"
13	훈음 철다리	510m 신설	1.20	훈음리	"	"
도로부문						
14	나진-원정 고속도로	길이 41km 너비 19~25m	183	나진시 선봉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오십구건설회사	합영 합작
15	나진-청진 도로 재건	길이 100km 확장폭 12m	16	나진시 청진시	"	"

Ⅲ. 봉사부문 투자 대상 목록(3개)

번호	대상명	내용	투자액 (백만\$)	위치	주최 회사	협조 형식
1	비파 호텔	1,000석 3만 6,000m ²	36	나진시 신해동	대외경제협력추진 위원회	단독 합영
2	안주 호텔	500석 2만m ²	20	나진시 안주동	오십구건설회사	"
3	투자촉진센터	2만 5,000m ²	50	나진시 남산동	"	"

<부표 3> 북한의 외자유치 우선 대상 목록(50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7)

번호	대상명	내용	예상투자액 (백만달러)	입지 위치	협력 형태
1	나진항 제1부두 2호 여객 베이스 정비	현존 베이스 124m를 개수 ·정비, 일부 준설	2	나진시 창평동	합영, 합작
2	나진항 제2부두 5호 및 베이스 정비	항만 설비 및 장비 3.5km 조차선 1.5km 벨트콘베이어 하역 설비 화차 전복기	24	나진시 창평동	합영, 합작
3	나진항 제3부두 정비	3.5km 조차선 1.5km 벨트콘베이어 하역 설비 화차 전복기	23	나진시 창평동	합영, 합작
4	나진항 제4부두 신설	부두 길이 1,050m 수심 13m 베이스 길이 160m 주요 운용 설비	180	나진시 창평동	합영, 합작
5	나진항 여객 부두 신설	부두 길이 2,000m 터미널 시설, 정비	80	나진시 창평동	합영, 합작
6	나진 - 훈흥간 철도 근대화	122km	15.86	나진시 선봉군 은덕군 셋별군	합작
7	나진 - 조소간 철도 광케화	49.5km	46.23	나진시 선봉군	합작
8	나진 - 완장간 고속도로 건설	연장 100km 폭 19~25m	183	나진시 선봉군	합영, 합작
9	나진 - 청진간 도로 확충	연장 100km 확장폭 12m	16	나진시 청진시	합영, 합작
10	개발촉진센터 건설	2만 5,000㎡	50	나진시 남산동	합영
11	호텔 건설	1,000 명 수용 3만 6,000㎡, 5성급	36	나진시 안주동	단독, 합영
12	야랑공항 확충	年 100만 명	30	청진시	합영, 합작
13	선봉공항 건설	年 100만 명	400	선봉군	합영, 합작
14	비파관광지구 정비	40만㎡	-	나진시 비파동	단독, 합영
15	신흥지구공업단지 정비	200만㎡	-	나진시 신흥동	단독, 합영

번호	대상명	내용	예상투자액 (백만원)	입지 위치	협력 형태
16	청계지구공업단지 정비(호텔공업단지)	15만㎡	-	나진시 청계동	단독, 협업
17	상업센터	5만㎡	-	나진시 안주동	단독, 협업
18	세라믹제품공장	-	-	나진시	단독, 협업
19	수산물 가공공장	2,500t	1.31	나진시 신흥동	협업 or 단독
20	메네랄워터공장	36,000kl	7.42	선봉군	"
21	식료품공장	2,350t	3.06	나진시	"
22	산채가공공장	8,000t	3	"	"
23	청량음료공장	100,000kl	1.10	"	"
24	토산품가공공장	-	-	"	"
25	수출형피복공장	1,000,000착	2.27	"	"
26	남성용피복공장	100,000착	1.65	"	"
27	여성용피복공장	200,000착	2.34	"	"
28	메리야스의류공장	300,000착	0.66	"	"
29	鞣공장	1,000,000족	2	"	"
30	합판공장	2,000,000㎡	3	선봉군	"
31	가구공장	6,000개	0.75	나진시	"
32	포장재공장	1,000만개	1.50	"	"
33	인쇄공장	70t	2	"	협업
34	제약공장	40t	4	"	협업
35	플라스틱건재공장	60만㎡	0.5	선봉군	협업 or 단독
36	플라스틱일용품공장	131만개	1.18	"	"
37	타일공장	20만㎡	1	"	"
38	위생자기공장	20만개	2	"	"
39	컴팩트판공장	1,000만개	5.2	나진시	"
40	일통전화제품공장	1,300,000대	2	"	"
41	전자제품공장	각종	-	"	"
42	컴퓨터공장	50,000대	15	"	"
43	세라믹트랜서공장	100,000,000개	12.33	"	"
44	완구공장	50,000개	0.5	"	"
45	사무용품공장	13,300,000개	1.50	"	"
46	자동차조립공장	10,000대	12	선봉군	"
47	선박수리공장	40척	4.81	나진시	협업
48	플로피디스크공장	2,000,000,000개	11	"	단독 or 협업
49	재봉기공장	50,000대	2.2	"	"
50	유리공장	10,000,000㎡	70	선봉군	"

*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투자가가 자기의 선택에 따라 선정하고, 금
년 중에 계약을 체결, 투자를 개시하는 임의의 대상 안건에 대해서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부표 4> 북한 외국인 투자 관련 법체계

구분	No	법규명	제정일	주요내용
상위법	1	외국인투자법	1992. 10.5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기본 母法
투자 3법	2	합영법	1994. 9.8	외국인 기업과의 합영 관련 기본 법규
	3	동법 시행 규정	1994. 1.20改	
	4	합작법	1995. 7.13	
	5	동법 시행 규정	1992. 10.5	공동 투자, 북한측 생산 및 경영 담당
	6	외국인기업법	1995. 12.4	단독 투자 외국인 기업의 경영 활동
	7	동법 시행 규정	1992. 10.5 1994. 3.29	
	부 수 법	8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993. 1.31
9		동법 시행 규정	1994. 2.21	
10		토지임대법	1993. 10.27	50년대 임대 이용권의 양도·저당 가능
11		동법 시행 규정	1994. 9.7	
12		외국투자은행법	1993. 11.24	합영 및 단독 투자자로 은행 설립 가능
13		동법 시행 규정	1994. 12.28	
14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1993. 12.30	노동력 알선 기관과 채용 계약 후생 보장
15		대외경제계약법	1995. 2.22	외국 기업과의 사업 계약 재판 사항 규정
16		대외민사관계법	1995. 9.6	북한 주민과 외국인간의 재산·가족 관계
17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	1995. 12.4	부기 계산년도 1월 1일~12월 31일
18		외국인투자기업명칭제정규정	1996. 2.14	명칭은 조선어로 표기해야 함.
19	외국인투자기업등록규정	1996. 2.14	등록은 도행정경제위원회에 나진·선봉지대의 경우는 시행행정경제위에 해야 함	
20	외국인투자기업부기검증규정	1996. 7.15	부기검증사무소 설치	
21	외국인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	1996. 7.15	부기 계산은 조선원 기준, 복식 간장	
관 련 법	22	환경보호법	1986. 4.9	환경 오염 방지 의무, 환경 피해 손
	23	외화 관리법	1993. 1.31	해 보상
	24	동법 시행 규정	1994. 6.27	외국환 관리 기본 규정
	25	지하자원법	1993. 4.	
	26	세관법	1983. 10.14 1993.11.17改	지하 자원 탐사 개발에 외국과 협력 세관 검사 및 관세 규정
	27	민사소송법	1976. 1.10 1994. 5.25改	2심재판제
	28	공증법	1995. 2.2	
	29	보험법	1995. 4.6	국가공증기관이 공증함. 외국 기업도 보험업 가능

특별법	30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993. 1.31	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특별법
	31	외국인출입규정	1993. 11.29	외국에서 지대에 직접 출입은 무사증
	32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	1994. 2.21	상주 기간 3년 이내, 인원 5명 이내
	33	자유무역항규정	1994. 4.28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
	34	외국인 체류 및 거주규정	1994. 6.14	단기 체류(90일 이내), 장기체류(90일 이상)
	35	세관규정	1995. 6.28	특별관세규정(관세 면제 및 감면 규정)
	36	중계하주대리업무규정	1995. 7.13	화물중계수송대리업에 관한 규정
	37	건물양도 및 저장규정	1995. 8.30	건물소유권, 이용권의 양도·저장 가능
	38	가공무역규정	1996. 2.14	가공 수출 사업 사항 규정
	39	외국인투자기업 인감조각 및 등록규정	1996. 3.28	조선어로 표기함(필요할 경우 외국어 포함할 수 있음).
	40	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	1996. 4.30	개발한 토지 등 재임대·양도·저당 가능
	41	광고규정	1996. 4.30	소개, 안내, 주문, 알림, 모집 광고 등 가능
	42	중계무역규정	1996. 7.15	중계 물품의 출하지 수량, 원산지 상표 조건 제한없음.
	43	청부건설규정	1996. 7.15	외국인 투자기도 설계 및 청부 건설 가능
	44	관광규정	1996. 7.15	관광증 또는 관광여행증 필요
	45	외국투자가대리인규정	1996. 7.15	북한인을 외국 투자가의 대리인으로 고용 가능
	46	화폐유통규정	1996. 7.15	지대 내에서는 조선원만 유통 가능함.
	47	국경검역규정	1996. 7.15	중계 화물의 검역은 외형 검사가 기본임.
	48	경계통행검사규정	1996. 7.15	여권 또는 여행증, 관광증, 통행증 필요
49	자동차등록규정	1996. 7.15	자동차 등록 처리 기간: 5일	

<부표 5>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현황

95.7.20	손성필 러시아 대사가 모스크바에서 나진·선봉지대 설명
95.8	로스엔젤레스에서 투자설명회 개최
95.9.22~25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 위원장 등이 북경에서 나진·선봉투자설명회 개최
95.10	중국 연변조선자치주 연길시에서 개최된 두만강 개발 계획투자설명회에 참석한 11개 외국 기업 대표 200여명이 나진·선봉 답사
95.10.25	김수용 김일성대학 교수가 東京, 京都 등지에서 나진·선봉지대 개발 계획 강연 및 요미우리신문과 회견
95.11.10	장성호 프랑스주재 북한대표부 경제참사관이 네덜란드 암스텔담 ING은행 본부 건물에서 '북한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
95.12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 등이 뉴저지에서 투자설명회 개최
96.1.18~21	김문성 대외경제협력추진위 서기장 등이 하와이에 서 개최된 6차 동북아경제포럼에 참석하여 북한의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 설명
96.4.22~23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이 미국 Washington, D.C.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하여 북한의 외자유치정책 등에 관해 설명
96.7.13~31	김정우 등 2개 투자유치단이 일본 및 동남아에서 투자설명회
96.9.13~15	나진·선봉 현지 투자포럼 설명회 개최 예정

자 료: 주요일간지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北韓 經濟制度의 問題點과 改革 展望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
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北亞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
策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북한영화 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和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軍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 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 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 95-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 96-10 통일과정에서의 민간단체의 역할
-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 정책 방향
-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 96-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 96-18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
-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
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
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葉琴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
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
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화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
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 96-08 일본총선 결과분석
- 96-09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 96-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7. 1 ~ 1996.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下)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研究報告書 96-19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 237-9288, FAX : 237-9289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6년 12월 일
發行日 1996년 12월 일
